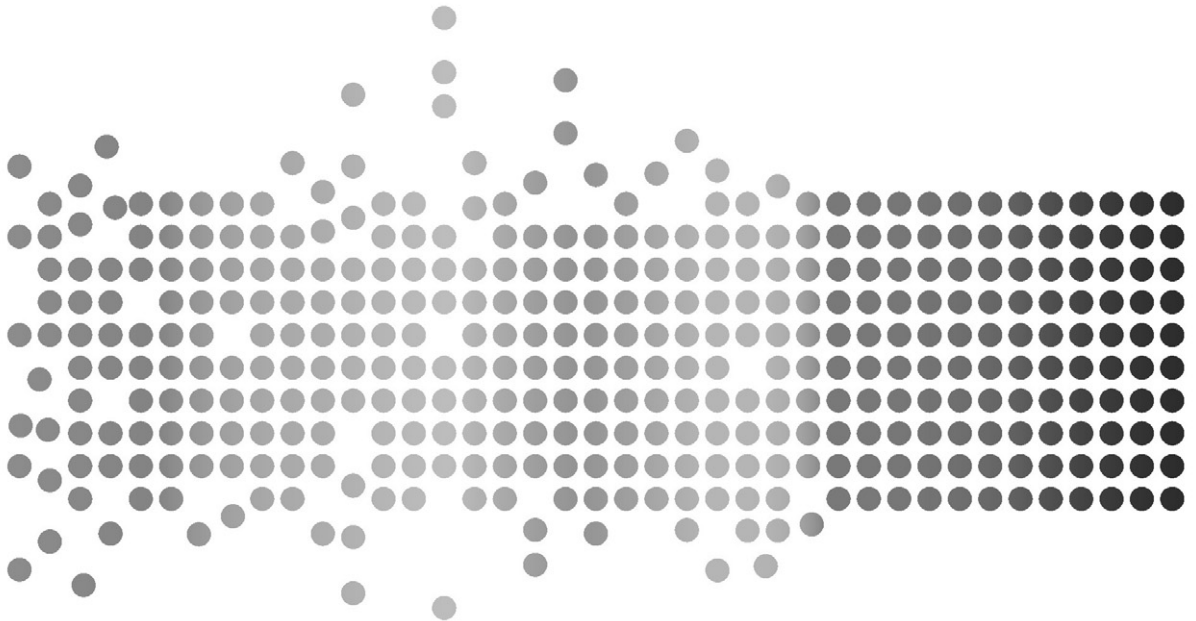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연구

이삼식·정경희·황나미·윤석명·김수봉·이윤경·이소정·신화연·
이지혜·김태현·박신영·서문희·최숙희·정익중·이규용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세계 최저의 저출산현상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20개 내외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도 매년 실시되었다. 그간의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전 사회·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이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 각각에 대한 평가와 환류(feedback)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종료되고 올해부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제1차 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성공리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의 목표와 성과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주요 핵심정책들을 선정하고, 이들 정책들 각각의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매년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정책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성과를 측정하고, 향후 개선책들을 계속해서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정책 성과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별로 제2차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5년도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차적인 성과 정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책담당자, 학자 등 관계자의 일독을 권한다.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준 본 원의 오영희 부연구위원과 김성희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1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5
 제2장 성과지표 개념 및 핵심과제 선정	7
제1절 성과지표 개념	9
제2절 핵심과제 선정	11
 제3장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 및 목표치	19
제1절 기본원칙	21
제2절 저출산부문 성과지표 및 목표치	22
제3절 고령사회부문 성과지표 및 목표치	79
제4절 성장동력 부문 성과지표 및 목표치	125
제5절 성과지표 목표 관리 방안	158
 제4장 결론	165
 참고문헌	169

표목차

〈표 2-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분야 핵심과제 (음영부문18개)	16
〈표 2-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핵심과제 (음영부문17개)	17
〈표 2-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핵심과제 (음영부문 10개)	18
〈표 3- 1〉 2010년 연령별 시설 이용 현황	22
〈표 3- 2〉 육아휴직률 추이	23
〈표 3- 3〉 주요 국가의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모의 휴가휴직사용률	24
〈표 3- 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육아휴직률 목표(안)	24
〈표 3- 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수 현황	26
〈표 3- 6〉 서구 선진국의 탄력근로(청구)권	29
〈표 3- 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 목표(안)	30
〈표 3- 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스마트오피스 설치 목표(안)	32
〈표 3- 9〉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추이	33
〈표 3- 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직장보육서비스제공의무이행률 목표(안)	34
〈표 3- 11〉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추이	37
〈표 3- 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가족친화인증기업수 목표(안)	38
〈표 3- 13〉 신혼부부 주택지원 호수 및 초혼건수 대비 비율 추이	41

〈표 3- 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신혼부부주택지원비율 목표(안)	43
〈표 3- 15〉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및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 추이	44
〈표 3- 1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목표(안)	44
〈표 3- 1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임신·분만 취약지역수 목표(안)	47
〈표 3- 18〉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추이	49
〈표 3- 1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목표(안)	50
〈표 3- 20〉 보육 및 교육 비용 지원 아동	53
〈표 3- 2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보육·교육비 지원을 목표(안)	54
〈표 3- 22〉 호주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현황, 2010. 6 기준	56
〈표 3- 23〉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평가인증참여율 및 인증률, 2010년 신청기준	56
〈표 3- 2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평가인증률 목표(안)	57
〈표 3- 25〉 시간연장형 보육의 필요성과 어린이집 이용 경험	59
〈표 3- 26〉 일본 특수보육 실시 보육소 수, 2010	59
〈표 3- 27〉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60
〈표 3- 2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목표(안)	60
〈표 3- 29〉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가구 유형별 이용 실적(월별 누적)	62
〈표 3- 30〉 연령별 돌봄 서비스 가구 유형별 이용 실적(월별 누적)	62
〈표 3- 3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 목표(안)	63

〈표 3- 32〉 방과후 프로그램 실적	65
〈표 3- 3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수 목표(안)	65
〈표 3- 34〉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목표(안)	68
〈표 3- 3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추이(누적)	70
〈표 3- 36〉 2010년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설치현황	71
〈표 3- 3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청소년 수련시설(누적) 목표(안)	72
〈표 3- 3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목표(안)	75
〈표 3- 39〉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77
〈표 3- 40〉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추이	77
〈표 3- 4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학대피해아동보호율 목표(안)	78
〈표 3- 42〉 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80
〈표 3- 43〉 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국제비교	80
〈표 3- 4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고령자 고용률(55~64세) 목표(안)	80
〈표 3- 45〉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실적	82
〈표 3- 4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중 50세 이상의 비율 목표(안)	82
〈표 3- 47〉 18세~59세 인구수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수 전망	84
〈표 3- 4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국민연금가입률 목표(안)	85
〈표 3- 49〉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추이	86

〈표 3- 50〉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2011년 12월말) ...	86
〈표 3- 51〉 퇴직연금 가입형태의 국제비교	86
〈표 3- 5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퇴직연금 가입률 목표(안)	87
〈표 3- 53〉 국민 건강검진 사업 특성 비교	88
〈표 3- 54〉 국가별 건강검진(암) 검진율 비교	90
〈표 3- 5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45세 이상 고령자 건강검진 수검률 목표(안)	91
〈표 3- 5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50~64세 국민 노후준비율 목표(안)	95
〈표 3- 57〉 노인일자리 사업 욕구충족 규모 추계	98
〈표 3- 5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일자리 창출 수 목표(안)	99
〈표 3- 59〉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수 전망	100
〈표 3- 6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65세 이상 인구 국민연금 수급률 목표(안)	101
〈표 3- 61〉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102
〈표 3- 62〉 연도별 치매노인수 추정	102
〈표 3- 6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목표(안)	103
〈표 3- 64〉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104
〈표 3- 65〉 국가별 고령화수준 대비 장기요양수혜율의 비율	105
〈표 3- 66〉 여러 가정에 따른 장기요양수혜율 추정, 2011~2015 ..	106
〈표 3- 6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장기요양수혜율 목표(안)	106

〈표 3- 68〉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체육참여율(%) 추이, 1994~2010	108
〈표 3- 69〉 국가별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참여율(2010년)	108
〈표 3- 7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체육참여율 목표(안)	109
〈표 3- 7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사회복지분야) 노인자원봉사 등록자수 목표(안)	111
〈표 3- 72〉 연령군별 문화향유 경험을 변화	112
〈표 3- 7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문화예술교육경험률 목표(안)	113
〈표 3- 74〉 선진국 고령자 거주상황	115
〈표 3- 75〉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실적	116
〈표 3- 7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고령자전용임대주택 목표(안)	116
〈표 3- 77〉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점유율 추이	118
〈표 3- 78〉 교통사고 사망률 국제비교(2009년 기준)	118
〈표 3- 7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교통사고사망률 목표(안)	119
〈표 3- 8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혜자 목표(안)	121
〈표 3- 81〉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추이	123
〈표 3- 82〉 2011년 현재 시도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수	123
〈표 3- 8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목표(안)	124
〈표 3- 84〉 AA적용 사업장 현황	126
〈표 3- 85〉 AA적용 사업장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평균)	126

〈표 3- 86〉 종사자 규모별 AA적용 사업장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	127
〈표 3- 87〉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여성고용실적(2010년 기준)	127
〈표 3- 88〉 AA적용사업장 여성고용비율 추세 유지시 전망치	128
〈표 3- 8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AA적용사업장 여성고용비율 목표(안)	129
〈표 3- 90〉 여성 고용관련 지표(15~64세)	131
〈표 3- 91〉 국가별 고용률 추이(15~64세 기준)	132
〈표 3- 9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15~64세 여성고용률 목표(안)	133
〈표 3- 93〉 전문 외국인력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134
〈표 3- 94〉 체류자격별 전문외국인력 추이	135
〈표 3- 95〉 전문외국인력 전망치	136
〈표 3- 9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전문외국인력 목표(안)	136
〈표 3- 97〉 OECD 국가들의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자 인구 비율, 2008	139
〈표 3- 98〉 OECD 국가별 25~64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취업률, 2008	140
〈표 3- 9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목표(안)	141
〈표 3-100〉 평생학습참여율 추이	144
〈표 3-10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평생학습참여율 목표(안)	145
〈표 3-102〉 산업재해 현황	147

〈표 3-10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산업재해율 목표(안)	148
〈표 3-104〉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추이, 2006~2010	150
〈표 3-10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국고채평균잔존만기 목표(안)	151
〈표 3-106〉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2006~2010	152
〈표 3-10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목표(안)	153
〈표 3-10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우수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수 목표(안)	155
〈표 3-10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지원센터 수 목표(안)	157
〈표 3-1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평가관련 가중치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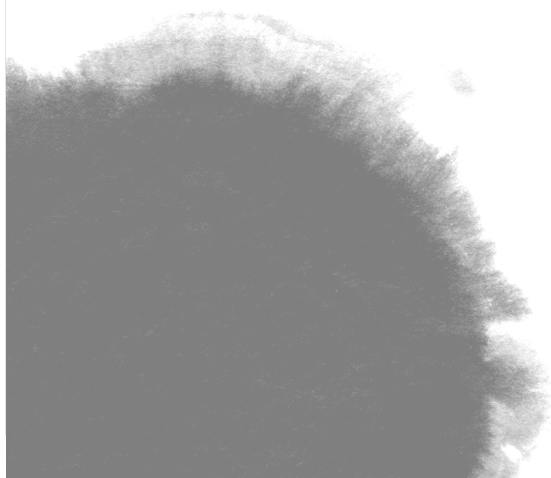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그림목차

〔그림 3- 1〕 주요 국가의 주당 근로시간별 여성근로자 분포, 2007	25
〔그림 3- 2〕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추세선	34
〔그림 3- 3〕 가족친화 인증기업수 추세선	37
〔그림 3- 4〕 25~34세 인구 추이(2000~2015)	42
〔그림 3- 5〕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 추정식	72
〔그림 3- 6〕 OECD 국가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2005	74
〔그림 3- 7〕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추이 및 향후 목표, 2003-2015	75
〔그림 3- 8〕 우리나라 건강검진 수검률(%)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	89
〔그림 3- 9〕 우리나라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89

[그림 3-10] OECD 국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	93
[그림 3-11] 우리나라 중장년층(45~64세)의 영역별 노후준비율(%) 94	
[그림 3-12] 우리나라 18세 이상 국민의 노후준비율(%) 추이	94
[그림 3-13] 50~64세 국민의 노후준비율(%) 추이	95
[그림 3-14] OECD 국가의 55~64세 고령자 고용률(%), 2008 97	
[그림 3-15] 노인일자리 창출 추이	98
[그림 3-16] 노인의 거주 형태	120
[그림 3-17] 향후 독거노인 증가 예측추이	121
[그림 3-18] AA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 추이	128
[그림 3-19] 우리나라의 고용률(%) 추이, 1980~2010 (15~64세 기준)	129
[그림 3-20] 우리나라의 고용률(%) 추이, 1980~2010 (15~64세 기준)	130
[그림 3-21]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천명)	138
[그림 3-22]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 추이와 추세선	140
[그림 3-23] 주요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2005 143	
[그림 3-2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추이	144
[그림 3-25] 평생학습참여율 추세	145
[그림 3-26] 사업장·근로자 및 재해자 추이, 1999~2008	146
[그림 3-27] 산업재해율 추세	148
[그림 3-28] 주요 국가들의 국제 평균잔존만기 연수, 2009년 말 기준	150
[그림 3-29] 국가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10	153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현상의 장기화와 고령화현상의 압축적인 진척으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는 국가 책무 설정
 -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 점진적 출산을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제3차 기본계획(2016~2020) : OECD국가 평균수준 출산을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수립 및 시행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에서 70개 이행과제, 236개 세부사업 추진
 - 제1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시행계

획 수립·추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 의거하여,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익년도 계획에 반영
 - 제1차 기본계획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해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2006~2010년 간 매 연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정부는 2011년부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시행중에 있음
 - 제2차 기본계획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과제들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목적을 둠
 - 가용자원의 집중적 배분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분야별로 정책의 핵심가치를 선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일환으로 핵심과제를 선정
 - 핵심과제에 대해 정책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5년 후 달성하여야 할 정책목표를 명료화
 - 목표 설정 및 실행을 통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제2절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서론, 성과지표 개념 및 핵심과제 선정,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 및 목표치, 결론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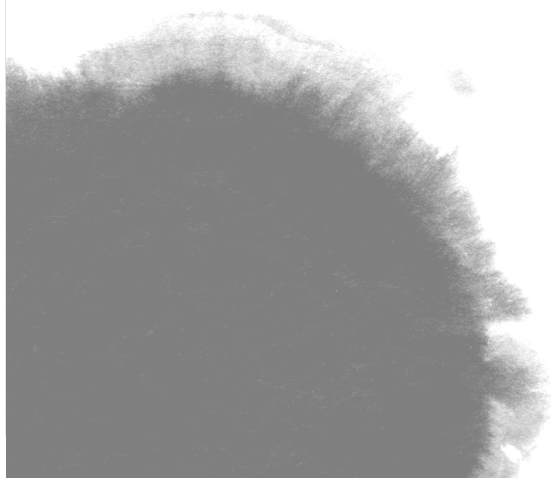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제2장에서는 성과지표 개념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과제를 선정
 - 성과지표 관련 이론을 고찰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의 개념 및 범주를 설정함
 -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의 수를 정책분야(영역)별로 배정함
- 제3장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별로 향후 5년간 추진하여야 할 목표치를 산정함
 - 핵심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함
 - 각 성과지표에 대해 향후 5년간 달성하여야 할 목표치를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산정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의 평가·관리방안을 마련함
 -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활용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과제별 성과지표를 종합하여 영역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수화(indexation)를 위한 가중치를 산정함
-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함

제3절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 외국사례 분석, 기존 통계(조사결과) 심층분석, 전문가조사 등의 방법을 적용함
- 선행연구 고찰은 성과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각 성과지표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등으로 이루어짐
 - 이는 성과지표 선정원칙을 마련하고, 과제별 성과지표 선정 및 목표치 산정에 활용함

- 외국사례 분석은 주로 과제별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산정하는데 활용함
 - 외국의 정책사례를 통해 해당 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표치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적용
- 기존 통계(조사결과) 분석은 과제별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산정하는데 활용함
 - 조사결과는 주로 지표의 선정 근거로 활용하며, 통계분석은 목표치를 계량적으로 산정하는데 활용함
- 전문가조사는 과제별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함
 - 그 결과는 핵심과제 선정에 참조함
 - 영역별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는데 활용함

02

성과지표 개념 및 핵심과제 선정

제2장

성과지표 개념 및 핵심과제 선정

제1 절 성과지표 개념

□ 정책평가 정의

- 설정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됨(Poister, 1979: 이윤식, 2004)
- 정책의 내용, 집행 그리고 집행에 따른 결과와 영향 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체계적인 방법들로 정의됨(Anderson, 1979: 안국찬, 2006)

□ 성과평가 기준

- 정책평가 기준은 능률성, 효율성, 경제성, 생산성,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등으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Nakamura and Smallwood, 1980; 이윤식, 2004)

□ 성과평가 개념

- 정책평가 기준의 하나로서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 정도이며, 이 중 산출(output)은 단기간 정책의 결과를 의미
 - 산출(output)은 정책 실행으로 산출된 결과로 측정
- 결과(outcome)는 정책의 최종 달성정도로 정책의 효과성을 의미 (Mohr, 1988)

- 이는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영향을 국민에게 미쳤는가를 측정(국민의 변화를 측정)

□ 성과평가 개념

-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출을 측정하고, 그 산출을 통해 나타난 결과(outcome)를 측정하여야 함
 - 산출(output) 평가는 정부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해 측정하기 때문에 단기간 평가가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용이함
 - 그러나 결과(outcome) 평가는 정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
- 현실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산출(output) 평가는 기능하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정책의 결과(outcome)를 제대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평가는 두 트랙(track)으로 실시되어야 함
 - 하나는 매년 단기간 산출(output)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또 다른 하나는 각 기본계획이 설정한 시한으로서 5년 간에 걸친 결과(outcome)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성과지표는 후자의 결과(outcome)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임
 - 따라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이들 각 지표를 통해 장기간 즉,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함
 - 단, 목표달성 정도를 매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1~2015년 사이 매년도 목표치를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속도, 예산 배분, 정책간 통·폐합 등을 조정하는데 참조하도록 함

-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결과(outcome)는 정책의 속성, 적합한 측정방법의 부재, 기초자료 부재 내지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에 한해 산출(output)을 준용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성과지표는 결과(outcome)와 산출(output)의 두 개념이 혼용되어 적용됨

제2절 핵심과제 선정

1. 기본원칙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각 성과지표는 핵심과제의 성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이 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성과지표는 어떠한 핵심과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특성
 - 저출산분야의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은 대부분 국민들이 생애과정에서 겪는 것으로, 정책은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은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각 사상(event)은 개인적으로도 장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은 어느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요인들 모두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함

- 고령사회 및 성장동력 분야의 정책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인구고령화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의거하여 배제되어서는 안됨
 - 인구고령화는 사회의 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중요한 영역들에 대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인구고령화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그 영향도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정책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특성을 고려하여, 핵심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과제들로 선정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음
 - 정책이 출산을 제고 및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적절한 과제(적절성 또는 합목적성)
 -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상이 넓은 과제(보편성)
 - 정책 수준(지원액 등)이 의도했던 변화(국민의 의식, 행태 등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한 과제(충분성)
 - 일정기간 방치 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이 고착될 수 있어 대처가 시급한 과제(시급성)
 - 정책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인 과제(효율성)

- 저출산의 원인 및 고령화의 영향과 관련한 중요한 영역을 다루는 과제 (포괄성)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과제 선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은 총 3개 분야(저출산, 고령 사회, 성장동력)로 구분되어 총 9개 중영역, 31개 소영역, 86개 세부영역, 231개 정책과제들을 포함
- 저출산 분야는 3개 중영역, 11개 소영역, 38개 세부영역, 95개 정책과제들로 구성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은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확대·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등 3개 소영역에서 8개 세부영역과 24개 정책과제들을 포함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 4개 소영역에서 17개 세부영역과 46개 정책과제들을 포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등 4개 소영역에서 13개 세부영역과 25개 정책과제들을 포함
- 고령사회 분야는 3개 중영역, 10개 소영역, 28개 세부영역, 7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은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등 4개 소영역에서 11개 세부영역과 36개 정책과제들을 포함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은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4개 소영역에서 12개 세부영역과 30개 정책과제들을 포함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등 2개 소영역에서 5개 세부영역과 12개 정책과제들을 포함
- 성장동력 분야는 3개 중영역, 10개 소영역, 20개 세부영역, 58개 세부정책과제들로 구성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등 4개 소영역에서 10개 세부영역과 31개 정책과제들을 포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등 3개 소영역에서 4개 세부영역과 13개 정책과제들을 포함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등 3개 소영역에서 6개 세부영역과 14개 정책과제들을 포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선정

- 핵심과제는 기본원칙 즉, 합목적성, 보편성, 충분성, 시급성, 효율성 및 포괄성에 의거하여 선정함
- 우선 포괄성에 입각하여 가급적 영역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핵심과제 수를 배분함
 - 분야(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와 상관없이 1개 소영역(총 31개)에 1개 핵심과제를 선정하되, 예외적으로 세부영역 및 정책과제들이 집

중된 소영역에 대해서는 최대 4개까지 핵심과제를 선정함(저출산분야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기반 조성”과 성장동력분야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고령자용 식품산업기반 조성” 소영역들의 경우에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지 않음)

- 그 결과 핵심과제의 수는 총 45개(총 231개 정책과제 중 약 20%에 해당)로 설정
- 각 소영역별 구체적인 핵심과제들은 앞서 제시한 기본원칙으로서 합목적성, 보편성, 충분성, 시급성 및 효율성에 의거하여 최종 선정함
- 총 45개(저출산분야 18개, 고령사회분야 17개, 성장동력분야 10개)

〈표 2-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분야 핵심과제(음영부분18개)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음영부분 핵심과제)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5)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2)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확대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확산(1)	유연근로제 확산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가족친화 직장·사회 환경조성(2)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9)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2)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2)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1)	양육수당지원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4)	취약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 지속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아이돌봄비 서비스 확대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확대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1)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취약계층 아동 휴먼 네트워크 형성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2)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기반 조성(0)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표 2-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핵심과제(음영부분1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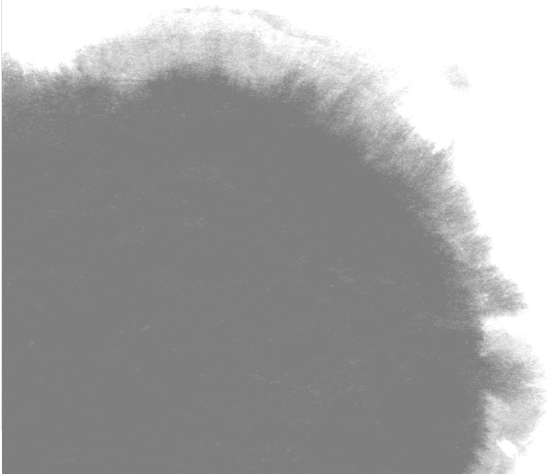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음영부분 핵심과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6)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2)	고령자 고용연장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제도의 조기정착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2)	국민연금의 장기지속 가능성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1)	노후설계 기반조성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1)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일자리 사업 체계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1)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 유인성 제고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3)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령기기초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2)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2)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 가구의 보호강화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표 2-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핵심과제(음영부분 10개)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음영부분 핵심과제)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6)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2)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여성, 관리자)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1)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다문화사회 적응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
	순순환적 직업능력개발체계 확립(2)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2)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0)	교육분야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1)	주택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중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1)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
고령친화 산업 육성 (2)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국내·외 시장 활성화(1)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고령자용 식품 산업기반조성(0)	고령자용 식품 산업 기반조성

0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제3장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제1 절 기본원칙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선정 및 측정함
 - 핵심과제의 성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함
 - 측정에 활용되는 자료가 적어도 매년 생산되고 그 결과가 익년도 평가기간 내에 공표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함
 - 측정기준(산식)이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선정함
- 성과지표별 향후 목표치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에 기반하여 산정함
 - 적합한 이론이 있는 경우 그 이론에 입각하여 목표치를 산정함
 - 외국 사례를 고려하여 한국의 상황(사회발전 속도 등)에 적합한 목표치를 산정함
 - 각종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목표치를 선정함
 - 해당 정책의 과거 성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목표치를 산정함

제2절 저출산부문 성과지표 및 목표치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부문

[A1] 육아휴직률(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가. 성과지표 선정

-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를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의 확대와 개선이 필수
- 전체 영유아 보육에서 영아보육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이므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현재 전체 영유아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31.3%에 불과하나, 0세 아동의 시설 미이용률은 71.4%로 대략 4명중 1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 3명은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 2010년 연령별 시설 이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아동수(A)	시설이용아동(B)		시설 미이용아동(A-B)
		어린이집	유치원	
총계(0-5세)	2,648,490	1,279,910 (48.3)	538,587 (20.3)	829,993 (31.3)
0세	438,169	125,133 (28.6)	-	313,036 (71.4)
1세	439,839	229,486 (52.2)	-	210,353 (47.8)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보육통계」

- 이는 영아 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거나 혹은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의미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을 그리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지님
- 특히 고학력 여성이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 국가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한편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 육아휴직률 = 육아휴직자수 ÷ 산전후 휴가지수 × 100(%)
- 이용자료: e-나라지표

나. 목표치 산정

- 제1차 기본계획(2005-2010) 기간 동안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의 결과로 육아휴직률이 크게 제고되었음
- 육아휴직률이 2005년의 26.0%에서 2010년 55.1%로 29.1%p 증가
- 동기간 중 육아휴직자수는 31,033명 증가하였으며, 산전후 휴가지수는 34,638명 증가하였음

〈표 3-2〉 육아휴직률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육아휴직률	16.6	21.2	24.1	26.03	27.9	36.3	42.5	50.2	55.1

자료: e-나라지표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육아휴직률 목표치
 - OECD 국가들의 육아휴직 사용율과 출산율 수준을 비교해 보면,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자녀 출산 시 여성이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을 강조)를 지닌 독일과 유사한 면이 있음
 - 제2차 기본계획 상 출산율의 정부 목표는 2020년 1.7명으로 2015년 경 1.35명 정도를 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률은 출산율이 1.38인 독일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3〉 주요 국가의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모의 휴가휴직사용률

(단위: %, 명)

	여성의 산전후 혹은 육아휴직 사용율	TFR
오스트리아	79.6	1.41
핀란드	75.9	1.85
독일	64.7	1.38
룩셈부르크	45.8	1.60
이탈리아	39.0	1.41
프랑스	35.5	2.00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10.10 검색

-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2005~2010) 육아휴직사용률은 연평균 16.2%씩 증가하였으므로,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2011~2015)에도 연평균 약 10%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에 육아휴직자수는 67,211명, 산전후휴가자수는 96,66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때 육아휴직률은 70.0%가 될 것으로 전망
-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2011~2015) 연평균 10%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육아휴직사용율의 향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표 3-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육아휴직률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육아휴직률	60.6	62.8	65.1	67.5	70.0

[A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률(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가. 성과지표 선정

- 육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률 제고와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업무숙련도 마모를 예방하고, 소득감소를 완화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

원함으로써 여성재직자의 경력단절 예방에서 육아휴직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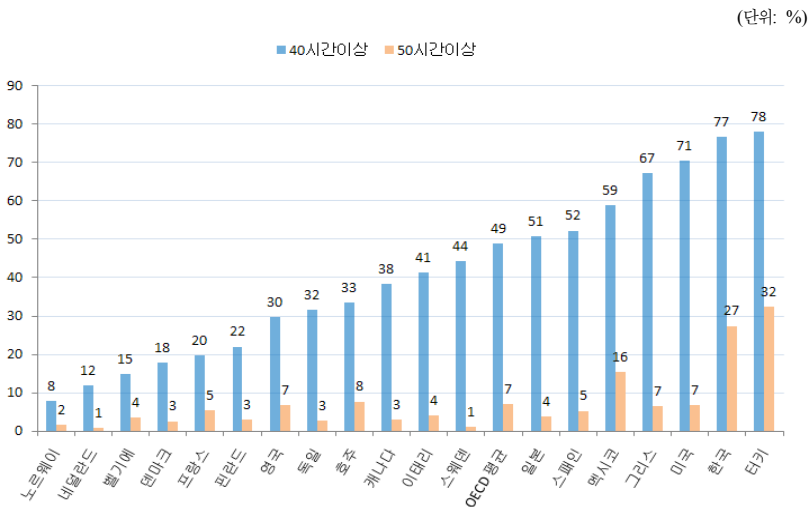
-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형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로서도 바람직한 제도임

○ 육아기간 중인 여성 노동자가 통상 근로시간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 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성화 하여 여성이 육아기간 중 경제활동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개선하며 육아-직장 간의 병행을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 OECD 회원국의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20% 이하이고 OECD 평균은 49%임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근로자의 77%가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27%는 주 50시간 이상을 일하는 등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음

[그림 3-1] 주요 국가의 주당 근로시간별 여성근로자 분포, 2007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 우리나라에서도 육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사용률 제고와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을 제고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가 2009년 10개소 31명(산전후 휴가자 수 대비 0.04%)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 이용률이 취약한 상태임

〈표 3-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수 현황

	2009	2010
이용자수	31	76

(단위: 명)

-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수를 제고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률 = $\text{이용자수} \div \text{산전후휴가자수} \times 100(\%)$
- 이용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네덜란드에서는 2000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단시간근로고용법」을 제정하여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였음
- 네덜란드는 아동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휴가제도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2000년부터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Wet Aanpassing Arbeidsduur: WAA)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단시간근로와 상용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보너스, 부가급여,

훈련, 휴가 등과 관련하여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단시간근로로 일하는 유인책을 제공

- 네덜란드는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유럽 최고이나, 비자발적인 단시간근로가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러한 단시간근로 중 아동양육을 목적으로 단시간근로를 선택하는 노동자들이 많음
- 법적인 휴가제도 및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한 사용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개별 사내에서 제공되는 일과 양육의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들이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단시간근로 근무로 육아에 투자할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첫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는 네덜란드 여성은 17%에 불과하며, 이는 일과 가사의 병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 이런 근무형태가 자리를 잡으면서 네덜란드 출산율은 1.7~1.8명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

□ 독일에서는 「단시간근로 및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단시간유기계약 법률’)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한시적으로 제정된 취업촉진법을 대체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단시간근로권)’이 도입되었음

○ 이 법률은 업종의 제한 없이 상시 1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민간·공공부문(공무원 제외)을 구분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희망개시일 3개월 이전에 이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2000년 오브리법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단시간근로권을 인정(자발적인 단시간근로요구권)하고 있음

-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에 따른 자발적(chosen)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단시간 근로 노동에 대한 개입과 개별 노동자의 동의권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일본에서 육아를 위한 단시간근무제도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05년 31.4%에서 2008년 38.9%로 증가(일본 후생노동성, 2009)
 - 제도가 있는 기업 중 여성이용자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08년 12.9%
 - 또한 가족간호를 위한 단시간제도가 있는 기업의 비율도 2005년 34.6%에서 2008년 39.9%로 증가함
 - 제도가 있는 기업 중 이용자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08년 1.1%
- 서구 선진국 20개국 중 17개국이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를 위하여, 6개국은 배우자 및 노인 등 가족간호 및 돌봄을 위하여 대안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탄력근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Hegewisch & Gornick, 2008)
 -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국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참여한 기업에 사회보장금 감액,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개선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음(김영섭, 2003)
 - 영국 기업의 70%(2006년)에 풀타임에서 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교대제 유형 변경(45%), 일자리나누기(Job-share; 31%), 재택근무(26%), 집중근로시간(16%) 등의 제도를 가진 기업도 다수 있음
 - 영국과 뉴질랜드는 근로자에게 탄력근로 청구권을 부여. 영국에서는 사업주가 거부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명시함
 - 근로자의 탄력적 근무로 인한 추가 비용의 부담이 발생할 때
 - 근로자의 탄력적 근무가 고객 만족이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때
 - 기존 인력의 업무 재조정 또는 추가인력의 채용이 불가능할 때
 -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을 때

〈표 3-6〉 서구 선진국의 탄력근로(청구)권

부여되는 권리		하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청구권)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인 근로시간 단축권				✓		✓	✓	✓				✓						
육아를 위한 권리	출산 후 파트타임을 통한 점진적 복귀		✓	✓	✓		✓	✓	✓			✓	✓	✓	✓	✓	✓	✓
	육아휴직을 파트타임으로 대체		✓			✓				✓	✓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근로(청구)권	✓	✓											✓	✓	✓	✓	✓
	육아와 상충되는 초과근로/교대근무에 대한 거부권	✓												✓		✓		✓
가족간호 및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근로(청구)권		✓		✓							✓		✓			✓		✓

자료: Hegewisch & Gornick(2008), Statutory Routes to Workplace Flexibility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 내에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을 선진국의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인접국이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약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점진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

- 2011년 5월 일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에서 2008년 육아를 위해 단시간 근로제를 이용한 기업의 비율은 12.9%, 가족간호를 위해 단시간 근로제를 이용한 비율은 1.1%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을 5.0%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필요
 - 2009년의 0.04%에서 2011년 0.5%, 2012년에 2.0%, 2013년 3.0%, 2014년 4.0%, 2015년 5.0%로 향후 목표를 설정

〈표 3-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산전후 휴가자수	79,529	83,506	87,681	92,065	96,66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	408	1,761	2,848	4,095	5,51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	0.5	2.0	3.0	4.0	5.0

(단위: 명, %)

[A3] 스마트 오피스 설치 지역(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 성과지표 선정

- 미국 총무청은 워싱턴DC 인근에 원격근무센터(15~32인석) 14개소를 설립하였으며, 원격근무가능 종사자 비율을 2008년 45%에서 2010년 50%로 전환 계획
 - 미국에서 원격근무자 비율은 2000년 12.4%에서 2007년 26.3%로 증가함
 - 원격근무 네트워크기술 발달, 재택근무희망자 증가, 전자상거래의 확대, 전자통신기기를 업무에 사용하는 차세대근로자의 등장, 일 가정양립 희망 근로자 증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기인함 (Business Labor Trend 2008. 2)
 - 1995년 텔레워크에 관한 Public Law 104-52를 제정하여, 원격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원격근무 연방공무원은 102천명(2008년 1-12월 기준)이며, 이들의 64%가 주당 1-2일 혹은 3일 이상을 재택근무함
- 일본은 전체 근로자 중 원격근무 비율을 2009년 15%에서 2010년 20% 달성 추진(민간부문 원격근무 도입 촉진을 위해 “원격근무 환경정비체제” 제정)
 - 일본에서 텔레워크를 도입한 기업비율은 15.0%(2007년)
 - 미 실시기업은 적당한 업무가 없음, 근로시간관리의 어려움, 의사소통

의 부족, 정보기밀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들을 제시함

- 2004년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재택근무의 도입 및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정부부문에 대한 확산 정책으로 1997년 Government is Engine of Telework project, 민간기업에 대한 확산 정책으로 DUET(Do Ultra-Exciting Telework) Project를 각각 추진(Telework Day 지정 각종 캠페인 추진)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원격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공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결재, 영상회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등을 지원함

□ 네덜란드는 전 사업체의 49%가 원격근무를 실시(2007.12 기준) 중이며, 금융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집중됨

□ 우리나라에서도 유연한 근무형태를 확산하는 방안으로 스마트 오피스 설치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유연근로 형태 도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오피스 설치 지역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 스마트 오피스 설치 지역수
- 이용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스마트 오피스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범구축을 추진하고, 추후 민간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0년에 스마트오피스 2개소를 시범 구축(분당, 도봉구)
 - 시범 스마트오피스는 서울 도봉구청에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형(24석),

분당에 민간이 운영하는 수익형(25석) 스마트워크센터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에는 우선적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독려하여 90개소까지 확대 설치
 - 2009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2,483개소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6,399,449명, 임시·일용근로자는 1,257,532명
 - 2015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의 10%가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스마트오피스를 매년 20개씩 확대 설치
 - 2015년 전국적으로 90개로 확대 설치

〈표 3-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스마트오피스 설치 목표(안)

(단위: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스마트오피스 설치수	8	20	20	20	20
누적	10	30	50	70	90

[A4]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가. 성과지표 선정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시행령 제20조 1항)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급, 위탁보육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은 비용 부담, 엄격한 설치기준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의무 이행이 저조한 실정임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의무이행률은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2006년 35.2%에서 2010년 59.0%로 증가

〈표 3-9〉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추이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35.2	43.2	49.3	53.3	59.0

주: 200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07~2010: <http://www.escac.or.kr/>

- 현재 미국내 10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44,000여개의 직장 중 직장보육시설설치 사업체는 2,500여개(약 6%)로 추정되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약 20%가 직장탁아를 실시하고 있음
- 직장부모의 출·퇴근 등 사정을 반영할 수 있고, 일·가정양립 기반이 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92.7%가 육아와 근무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진술(서문희, 김은설, 장혜경 외, 2008)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가족친화적 직장·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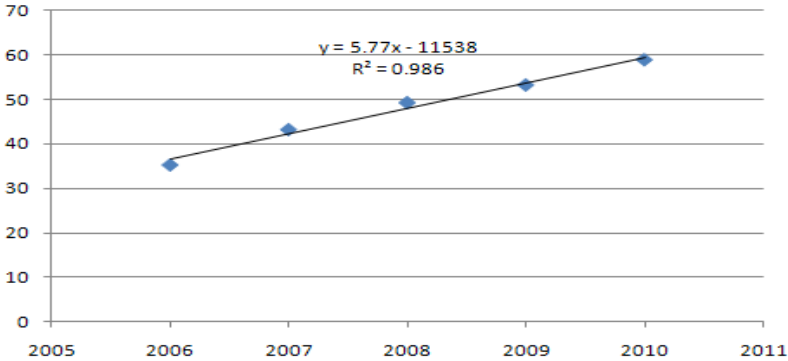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 (보육시설 설치, 보육수당, 위탁보육 이행 사업장 수) ÷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수 × 100(%)
- 이용자료: 고용노동부 직장보육서비스 이행현황

나. 목표치 산출

- 지난 5년간의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은 매년 8.5%씩 증가하여 2015년에 88.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단순 선형 회귀분석 기법(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추세선 추정이 가능
 - 지난 5년(2006-2010년)의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추세선을

구해보면, $Y=5.77X-11538$ ($R^2=0.986$)로 나타남

[그림 3-2]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추세선



- 위의 추세선을 이용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목표치는 2011년 65.5%, 2012년에 71.2%, 2013년 77.0%, 2014년 82.8%, 2015년 88.5%로 설정할 수 있음

〈표 3-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직장보육서비스제공의무이행률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0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65.5	71.2	77.0	82.8	88.5

[A5] 가족친화인증 기업수(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가. 성과지표 선정

- ☐ 일가족양립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시장 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은 69%로 ‘아무런 이

- 득이 없다'는 응답 31.%에 비해 약 2.2배가 높았음
- 일가족양립조치가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
 - 근로자 측면 성과는 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감소, 근로자의 가족생활 및 직무만족도 증가,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의 경력개발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 측면 성과는 우수인력의 채용 및 유지,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증가와 직무몰입 그리고 생산성 증가,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측면 성과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연구결과로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생산성본부가 분석한 “2008년도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에 따르면, 322개 상장법인 중 생산성이 높은 상위 20% 기업의 가족친화 지수가 45.9점으로 하위 20%(40.2점)보다 높게 나타났음(평균 40.6점)
 -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이직률 감소, 직무만족과 기업 이미지 향상 등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
 - 독일 헤르티에 재단(Hertie Foundation)의 조사결과 가족친화기업의 생산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30%가량 높았음
 - 가족친화기업이 직원만족도와 생산성 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족친화경영을 펼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1999년 고용평등과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수상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가족친화 기업 후보를 각 현의 노동국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인센티브로 Family-friendly 기업부문상(賞)을 수여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연방경제가족청소년부가 인증을 위한 범위 및 규정을 수립하고, 공기업인 일-가정관리회사가 프리랜서 감사원(auditor)을 교육시키는 형태로 일-가정제도(Work and Family)를 운영하고 있음
 - 인증 기업은 3년간 유효한 'Work and Family Audit' 증명서(가족친화기업 인증서에 해당)를 받으며, 인증을 위한 비용(대략 7,000유로에서 10,000유로 사이)의 일부를 주정부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음
 - 2010년부터 “최우수 여성·가족친화적 기업(Most Women and Family-Friendly Enterprise) 경연대회”를 통해 노력한 기업에게 주정부 차원에서 상을 수여함
- 호주 노동부와 고용균등위원회에서는 일-가정인증프로그램(Work and Family Grants Program)을 운영하여 소규모 회사 직원들의 이직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 인센티브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에 드는 기업의 비용을 \$15,000까지 보조하고, 일·가정상(National Work and Family Awards)을 수여
 - 결승에 진출하거나 우수한 회사들은 뉴스레터(Work and Family Newsletter), 소책자(Finalist's Booklet), 지침서(Best Practice Guide), 각종 언론, 그리고 호주 노동부 웹사이트에 소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8년 도입된 이래, 2008년 14개소, 2009년 20개소, 2010년 33개소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
- 이와 같이 인증기업수가 적은 이유는 선정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참여하는 직장(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임
- 일·가정 양립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가족친

화적 직장·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 이용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2008년 가족친화기업인증제가 도입된 이래 인증기업수는 2010년 33개 소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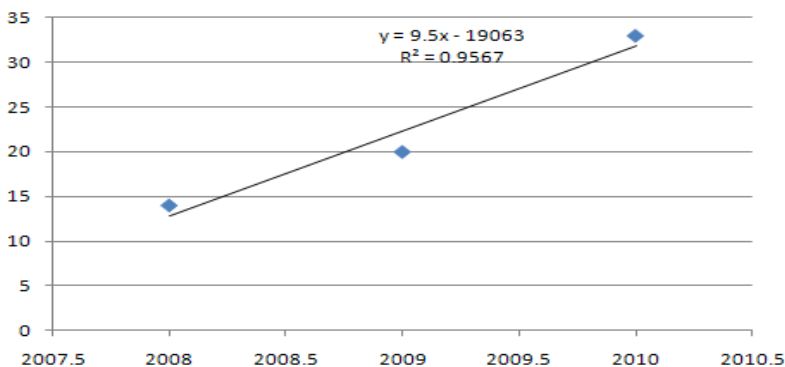
〈표 3-11〉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추이

	2008	2009	2010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14	20	33

주: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자료(2008-2010년)

- 단순 선형 회귀분석 기법(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추세선 추정이 가능

〔그림 3-3〕 가족친화 인증기업수 추세선



- 지난 3년(2008-2010년)의 가족친화 인증기업수 추세선을 구해보면,
 $Y=9.5X-19063$ ($R^2=0.957$)로 나타남
- 위의 추세선을 이용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가족친화 인증기업수 목표치는 2011년 42개, 2012년에 51개, 2013년 61개, 2014년 70개, 2015년 80개로 설정할 수 있음

〈표 3-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가족친화인증기업수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42	51	61	70	80

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A6]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가. 성과지표 선정

- 우리나라에서 만혼화는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만혼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내집 마련 곤란’의 비율이 높음
-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의하면 결혼비용(주택마련 비용, 혼수 및 결혼식 비용)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25~29세, 30~34세에서 각각 18.6%와 21.6%로 다른 이유보다 높게 조사되는 등 주택마련의 어려움이 결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1인가구의 경우 30~39세가 50만9천가구로 남성 1인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나타냄
- 또한 결혼을 해도 내집 마련 등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 자

녀출산을 미룸으로써 2010년에는 첫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30.1세로 상승

□ 외국에서는 가족형성 및 가족확대 등을 위하여 주거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삼식·이지혜 외, 2009)

○ 프랑스에서는 가족정책으로서 주택수당을 가족급여 중 1개의 급여로 지급하며, 이는 가족주택수당(ALF;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과 사회주택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족주택수당은 도입 당시 2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지원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① 결혼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중, 현재 자녀가 없고 결혼당시 양측 모두 40세 미만이었던 경우, ② 1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③ 적어도 65세 이상의 부모 1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 ④ 장애율이 적어도 80%에 이르는 직계 및 방계 존·비속과 동거중인 가구 등까지 확대함

○ 스웨덴에서는 일정수준의 소득 이하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사회부조를 받는 수급가구에게는 주택보조(Housing Assistance), 그 외 연금수급자에게는 BTP, SBTP, KKB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주거수당은 자녀수(가구원수), 결혼여부, 주거비용, 주택규모,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최대 급여수준이 결정됨(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중 50% 이상은 주택수당을 받고 있음)

- 주거수당의 일부는 가족수당으로서 여겨지며, 자녀에 따라 최대 1명 SEK 2,600, 2명 SEK 3,200, 3명 이상 SEK 4,000을 받을 수 있음

○ 덴마크의 경우 젊은 커플에 대해서 최대 115%까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융자제공, 영국의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 89%까지 융자하는 제도로 젊은 층의 자기취득을 권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주택청약당첨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특별공급(2008년에 도입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하고 저리의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제고 및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8년 이래 계속하여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함
- 심화되고 있는 만혼화를 둔화시키거나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결혼 5년 이내에 자녀를 두거나 임신을 하면 시세보다 15% 이상 저렴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도록 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결혼 년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1순위 : 결혼 3년, 2순위 : 5년이내) 초기 신혼을 우대하고 조기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음
 - 순위 내 경쟁 시에는 출산 장려 목적을 고려하여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함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음
 - 특히,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공이 임대하여 다시 전세로 임대하는 전세임대에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으며 또한 전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가족형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택지원비율(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공급자료 활용)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 신혼부부 주택지원비율 =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되는 분양주택 특별 공급호수+임대주택의 우선공급호수+신혼부부전세임대호수)÷연간초혼 건수×100(%)
- 이용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신혼부부 주택지원 추이

-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이 계획된 것은 2008년 3월부터이지만 법제가 정비된 것은 2008년 7월이며 이를 계기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그리고 전세임대를 제공하게 됨
- 신혼부부를 입주대상으로 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5만호, 총 150만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과 관련되어 있음

〈표 3-13〉 신혼부부 주택지원 호수 및 초혼건수 대비 비율 추이

(단위: 호, 건, %)			
구분	2008.70 후	2009	2010
신혼부부 주택합계(A)		22,997	22,866
- 신혼부부 분양		488*	3,824*
- 신혼부부 임대	9,695	17,249	14,039
- 신혼부부 전세임대	185	5,260	5,003
혼인건수(초혼기준)(B)		250,674	268,541
주택지원 비율(B/A*100)		9.17	8.51

자료: 분양주택은 <http://www.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 보도자료 참고, 신혼부부 임대는 LH 내부 자료 참고하여 작성, 전세임대는 국토부 자료

주: * 신혼부부용 분양주택은 2009년 1차 보금자리 신혼부부특별공급, 2010년 2차, 3차 보금자리와 위례 신혼부부특별공급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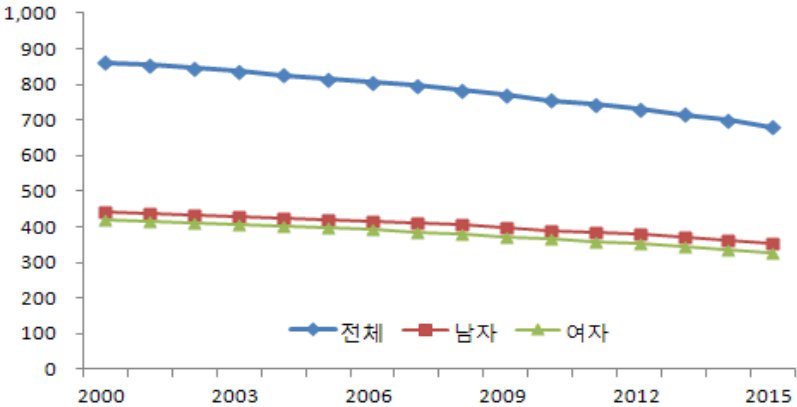
-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장애자나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

별공급, 3자녀 이상 가구대상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가구 대상 공급이 혼재되어 있어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공급을 과도하게 늘리기 곤란

- 2010년 공급된 보금자리 분양 주택은 경쟁률(2차 2.8:1, 위례신도시 23.6:1, 3차 2.9:1)이 높았으나, 임대주택은 인기가 없어 과도하게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주택지원을 입주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수로 하는 것이 적절하나 결혼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에서 매년 초혼건수를 대체변수로 활용
- 목표치 산정에는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하나는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지원을 과감하게 늘리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임
 - 또 다른 하나는 향후 가임인구의 감소와 독신경향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모가 되는 전체 초혼건수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임

[그림 3-4] 25~34세 인구 추이(2000~2015)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중인 2013년 신혼부부주택지원비율을 10%로 달성토록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치로 산정함
- 10%대를 유지하도록 하는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신혼부부외에도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많으며 앞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 현실적인 필요를 감안하였기 때문임.(2010년에 혼인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억제되었던 혼인이 2010년에 발생한 영향이 있기 때문임)

〈표 3-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신혼부부주택지원비율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연간 초혼건수 대비 신혼부부 주택지원비율	9.0%	9.5%	10.0%	10.0%	10.0%

[A7]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가. 성과지표 선정

- 가족생활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사적 영역이고 누구나 가족생활에 대해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는 편견으로 그동안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그러나 가족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준비하고 각 단계에서 해야 하는 과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 이에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한 지표로 선정

【산식 및 이용자료】

-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
- 이용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나. 목표치 산정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 남성 대상,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 대상, 중년기나 노년기 성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지난 6년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센터에서 실시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2004년 3개소 2,283명에서 2010년 136개소 323,685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음

〈표 3-15〉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및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 추이

(단위: 개소,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센터수	3	15	46	64	80	96	136
참여인원	2,283	18,903	78,851	160,579	130,361	275,562	323,685
센터당 참여인원	761	1,260	2,509	1,609	2,871	2,380	7,281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10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현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되, 현 추세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충 시점에서 비교적 급격히 증가해 왔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증가 추이가 다소 완화될 것을 고려하여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매년 10%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3-1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목표(안)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356.0	391.6	430.7	473.8	521.2

[A8] 임신·분만 취약지역수(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가. 성과지표 선정

- 최근 고령임신의 증가로 인한 산과적 의료사고 위험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출산을 감소 및 건강보험수가 지불보상체계 미흡 등으로 인한 산부인과 병·의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수요층이 적은 지역의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폐업하거나 산과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전국에 출산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2006년 44개소에서 2010년 52개소로 증가되어 이들 임신·분만 취약지역 임산부들은 타 지역으로 산전·후 진찰을 받거나 원정 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산부인과 병의원의 분만서비스 기피로 인하여 임신 및 출산 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의료 접근도가 낮은 임산부들은 적시에 적절한 산전 진찰 및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임산부는 물론 출생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낮은 산전·분만 서비스의 접근성은 결국 가임계층의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경우에도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수 감소와 야간분만에 따른 야간근무 기피로 산부인과 의사 부족현상과 함께 임신·분만 취약지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의사 수는 30년 전보다 2배 증가하였지만, 산부인과 의사 수는 10% 감소하여, 산과서비스를 받고자 병원을 찾아 떠도는 '출산난민'이 60만명 수준임
- 이에 대하여 정부는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의원을 개설·운영할 경우, 최대 1억 엔까지 지원하거나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의사회와 공동으로 출산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응급분만서비스 또는 고위험 산모관리를 위해 '닥터 헬리콥터'를 운항하여 안전출산을 도모하기로 함
- 산부인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분만실과 산후조리실 등 시설을 갖춘 시립조산원을 설립함

- 우리나라도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신·분만 취약지역을 해소하여 조기 산전진찰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사망 및 후유증 사전예방, 조기치료 등 안전한 출산 도모 필요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신·분만 취약지역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지역 내 분만율이 30% 이하(지역 내에서 분만이 가능하지 않아 해당지역 전체 분만건수 중 70% 이상이 타 시군에서 분만하는 곳) 지역이거나 1시간 내 분만 가능 병원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분만이 가능한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전체 시군면적의 30% 이상인 곳)을 임신·분만 취약지역으로 정함
- 산부인과(분만실) 유무의 단편적 분석에서 벗어나 실제 분만 현황과 의료이용 현황, 생활 영역 등을 고려하여 분석·도출
- 2010년 임신·분만 취약지역 52곳 중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지역 21곳과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지역 31곳으로 구분하여 취약지역 해소전략을 마련함

- 산부인과 설치 가능지역 21곳에 대해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모두 산부인과 설치를 추진함
-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 안전분만을 위해 인접지역 의료기관 지정, 임산부 등록관리 및 분만 모니터링 강화, 주산기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

〈표 3-1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임신·분만 취약지역수 목표(안)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임신·분만 취약지역수	48	42	36	30	25

[A9]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가. 성과지표 선정

- 정부는 2006년 4월부터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산모 및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출산 후 산모의 육체적 노동으로부터의 부담완화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돌봄서비스는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효과적 시책으로서 산모의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임
 - 주민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보건소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22.0%) (황나미, 2007)
- 그러나 무료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2주간 원칙) 대상은 저소득 가정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극히 제한되어 있음
- 연간 수혜대상 산모수가 2007년 4만명, 2009년 53,400명, 2010년

62,500명으로 전국 연간 출산의 7~10% 수준임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산모들은 핵가족화로 인해 산모 자신과 신생아를 돌보아 줄 인력이나 여건 부족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민간 산모도우미를 이용하여 산후 조리를 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으로 인한 불편감과 신생아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간 이용시 평균 2백만원, 산모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평균 1백만원의 비용지출로 중산층이하 산모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함으로써 호흡기 및 로타바이러스 등에 의한 위장관염 등의 전염 원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인해 사망하는 신생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국에서도 산모도우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출산 후 신생아 관리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함께 비용부담 때문에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산후 케어(care)사업을 시작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산원을 산후케어 시설로 지정하여 저소득층 산모가 출산 후 조산원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일례로, 스가사시 현은 출산 직후의 산모 및 신생아가 조산원에 입소하여 수유지도와 정신적 측면의 돌봄을 받을 경우, 지불비용의 1/2을 보조하고 있음(1일 약 25,000엔의 입원 및 서비스 비용이 발생되며, 비용보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산모와 출생아의 상태에 따라 입소가 더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함)
-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민간단체(NAPCS:National Association of Postpartum Care Services)에서 조산사 또는 간호사

에 의해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산후돌라(Postpartum doula: 타여성을 돕는 유경험 여성) 및 수유상담돌라가 비의료적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자원봉사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 모성의 출산과정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심신을 지치게 하고, 건강취약시기로 출산 이후 4주 동안은 산모의 건강회복이 중요하고 신체적·생리적으로 독립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생아 관리가 중요한 시기임
- 따라서 의학적 관점에서 산후 불편감 해소 및 조기회복을 위해서는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해 산후 4주 이내 신생아 관리 및 가사일 등을 보조해 주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산후도우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는 출산 장려 및 출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대상의 확대가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이 될 것임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 산모·신생아도우미수혜율 = $\frac{\text{연간수혜자수}}{\text{연간 출산모수}} \times 100$ (%)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은 2007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0년까지 전체 산모의 7~13% 수준이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표 3-18〉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2.3	8.1	7.4	12.0	13.2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보도자료)

- 출산 지원을 위한 공적지원사업 중 산모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에도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수혜율을 유지하거나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수혜율이 지난 5년 동안 13%(연평균 3%p)로 높아진 것을 감안하여,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에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2% 포인트씩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연도별 목표치는 2012년 15%, 2013년 17%, 2014년 19%, 2015년 21%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수혜대상을 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3-1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산모·신생아도우미수혜율 목표(안)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14	15	17	19	21

[A10] 보육·교육비 지원율(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가. 성과지표 선정

-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애주기 중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국가 경제발달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음
 - 여성 노동력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적 필요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 증대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국가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음

- 1990년대 이후 여성 취업률이 높은 국가들이 출산 수준도 높다는 점이 일가정 양립 지원의 중요성을 나타냄

- 정부는 과중한 교육비 문제와 자녀양육 부담이 출산 억제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채택하여 왔음
- 이외 보육서비스 투자는 아동과 가정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향상과 위험행동의 억제, 가계의 사회복지 의존도 약화, 가계소득 증대, 성 평등성 향상, 가정 내 폭력 발생건수 저하, 낮은 범죄율, 위험에 처한 아동의 초등학교 통합 기회 증진, 더 높은 진학률, 특수교육 참여 감소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GDP대비 1%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그 대상이 되는 영유아들과 그 가족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됨을 주장하고 있음(OECD, 2006)
-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대부분은 시설보조금 형태로 부모의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를 80~90% 부담하고 있으며, 영미계 국가들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화하여 부모보조금 형태로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유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최소 1년에서 3년의 취학 전 교육이나 유치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교사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에게 인지적 능력보다는 사회성 기술을 기대하고 있음)
- 프랑스는 3세 이상아에 대해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초등학교 입학 2년 전인 3~4세아를 대상으로 주당 15시간 38주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기 영유아 보육과 교육 지원이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대상의 확대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학전 1~3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만5세도 소득제한을 두고 있음

- 2012년부터 만5세 누리과정으로 전체 아동에게 비용 전액 지원이 예정되어 있음. 또한 3, 4세로의 누리과정 확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 프랑스, 독일 등은 3년, 영국은 2년 무상교육을 실시

- 이와 같이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육·교육비용을 지원 받는 아동의 비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자녀양육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육·교육비지원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 보육·교육비지원율 = 영유아보육비·교육비수혜자 ÷ 0~5세 아동 수 × 100(%)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나. 목표치 산정

-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추이

- 부모 부담 보육·교육비 지원은 당초에 특정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왔음

- 2011년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함

- 지원기준으로서 상한소득액은 4인가족 소득인정액 480만원으로 2012

년에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육아동 70%에 해당하는 4인가구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만5세에 한하여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득제한을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음
- 이 경우에 만5세아 20만명 정도가 지원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됨
-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족 자녀도 전액 지원 대상임
- 아동 무상보육교육 등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표 3-20〉 보육 및 교육 비용 지원 아동

(단위: 명, %)

구분	인구수(A)	어린이집(B)	유치원(C)	계(B+C)	비율 (B+C/A)
0~2세	1,358,043	470,568	-	470,568	34.7
3~5세	1,376,933	408,312	285,000	693,312	50.4
계	2,734,976	868,344	292,400	1,160,744	42.4

주: 1) 인구수는 2010년 12월 주민등록인구임.

2) 어린이집 자료는 2010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1년 예상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 학비 지원 계획.

-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보육·교육비 지원율의 목표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2011년도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대상 소득기준은 동일하여 수혜자 비율이 동일함
 - 2012년에는 만5세아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수혜자 수가 약 20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 2013년에는 0~4세아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용자 수는 고정하고 추정함
 - 2014년에는 만4세 누리과정 추가 도입으로 수혜자 수가 약 15만명 정

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함

- 이와 같은 산정 결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기간 동안 0~5세아 대상 보육·교육비지원율은 2011년 42.4%, 2012년 50.0%, 2013년 56.5%, 2014년 62.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표 3-2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보육·교육비 지원을 목표(안)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0~2세	34.7	34.7	40.0	40.0	40.0
3~5세	50.4	65.0	73.0	84.0	84.0
0~5세	42.4	50.0	56.5	62.0	62.0

[A11] 보육시설 평가인증률(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가. 성과지표 선정

- 우리나라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하여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음
- 어린이집은 각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이 일차적으로 지도 감독 책임을 지는데,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교육·보육 내용 지도에 한계를 보여 왔음
-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였음
-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노력에 기초가 되는 제도로, 참여 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어린이집 서비스가 정부가 정한 일정 기

준에 들어갈 경우 3년을 인증하는 것임

- 2009년까지 1주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는 제2주기로 평가가 추진됨.
2주기 평가는 지표의 개선 이외에 지방정부 역할 강화, 보육정보센터 등 사전 조력 인프라를 통한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으로 인증시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 도입 등을 특성으로 함
- 외국에서도 어린이집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인증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민간단체(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NAEYC)가 어린이집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인증하고,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보육서비스 질 관리 수단으로 지원하거나 활용
 - 영국은 교육기관 의무 평가제도로 교육기준청(Ofsted)은 2006년 아동보호법(2006 Child care Act) 제49조 및 50조, 2008년 아동보육규정(The Childcare(Inspection) Regulation 2008)9항과 10항(regulation 9 and 10)에 의거하여 모든 보호·교육 기관과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검사(inspection)하여 그 점수와 장단점 등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 5쪽 정도를 총평 및 항목별 평가 등급(A~D)과 평가 내용 전문을 그대로 부모에게 공개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온라인으로 누구라도 검색이 가능함
 - 호주는 국립보육인가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가 보육서비스 평가인증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역별 4단계 점수를 공개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연계하여 평가인증 미통과 시설 아동은 부모보조금 지원을 중단함
 - 보육료 지원과 연계하는 호주는 2011년 현재 6,000여개 육아지원기관 중 좋은 평가(High Quality)를 받은 비율은 95%임

〈표 3-22〉 호주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현황, 2010. 6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인증(A)	불인증	5단계 심의(B)	신규시설 자체평가	전체	심의 후 인증통과 비율(C=A/B)
종일제	4,575	339	4,914	1,100	6,014	93.1
가정보육센터	279	16	295	36	331	94.6
방과후	2,888	93	2,981	559	3,540	96.9

자료: 호주 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 요컨대, 평가인증제도는 정부가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으로, ‘평가인증률’은 우리나라 어린이집 중 어느 정도가 이러한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나타내는 성과지표로 대표성이 있음

【산식 및 이용자료】

- 보육시설 평가인증비율 =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평가인증 추이

- 2011년 4월 기준으로 2010년 신청 기준을 완료하여 70%가 평가인증
 - 2010년에 총 38,021개 시설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 중 26,344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률은 69.3%

〈표 3-23〉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평가인증참여율 및 인증률, 2010년 신청기준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A)	38,021	2,034	1,468	401	19,367	74	14,677
인증(C)	26,344	1,916	1,422	260	12,432	27	10,287
인증률(C/A)	69.3	94.2	96.9	64.8	64.2	36.5	70.1

주: 1) 전체시설은 2010년 12월말 전국 보육통계 기준임.

2) 참여신청 시설 수는 신청 후 자체포기, 재신청 등의 이유로 중복 산정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4).

- 현재 평가인증은 교재교구비 지원과 연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본보조금, 부모보육료 지원 등 기본적 보육비용 지원과의 연계가 예고되어 있어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11년에 신규인증 2,500개소를 계획하였으나 4,000개 시설이 신규인증 대기 상태이어서 인증 일정을 추가하여 약 4,500개소가 신규인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인증률은 81%에 이를 전망
- 재정 지원과 평가인증 간의 연계를 강화시킬 경우 인증률은 크게 증가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97%에 이를 것으로 예상(나머지 3%는 중국적으로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
- 2012년 영아 기본보육료와 연계하여 인증률은 92%로 급격히 높아지고 이후 상승세는 둔화되어 2013년에 95%, 2014년에 97%로 나타날 것임

〈표 3-2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평가인증률 목표(안)

(단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증 시설 비율(신청 연도 기준)	81	92	95	97	97

[A12]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율(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가. 성과지표 선정

- 여성의 취업 등 사회활동 유형이 다양해지고, 근무 형태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종일제 서비스 이외 연장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상당수이나, 공급에 한계가 있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그간 보육정책은 일하는 엄마 중심의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획일적 서비스 공급 구조로 추진되었음
- 특히 취약보육 수요는 일정하지 않고 간헐적인 경우가 많아 수요조사로 실제 수요 추정에 오차가 많으며, 인건비 지원 없이 운영이 어려움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간 시간연장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왔음
 - 12시간 운영원칙의 어린이집은 야간, 24시간 및 휴일보육 서비스 제공
 - 최근 거의 대부분 종일반을 두고 있는 유치원도 저녁 10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야간돌봄보육을 도입하였음
- 이와 같이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비율’은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선정할 수 있음

【산식 및 이용자료】

-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 (야간돌봄 유치원수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수) ÷ (유치원 수 + 어린이집 수) × 100(%)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

나. 목표치 산정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의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필요성에 비하여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간연장형 보육의 필요성은 야간보육의 경우 34.9%, 24시간제 보육 11.4%, 휴일보육 23.4% 등으로 나타나나, 실제 이용한 비율은 4.9%, 0.7% 및 1.3%에 불과함

〈표 3-25〉 시간연장형 보육의 필요성과 어린이집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 분	필요성					전체	어린이집 이용경험
	상시	1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야간보육	7.1	9.3	14.4	4.1	65.1	100.0(3,303)	4.9
24시간제보육	1.5	1.1	3.2	5.6	88.6	100.0(3,303)	0.7
휴일보육	-	5.0	11.6	6.8	76.6	100.0(3,303)	1.3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일본의 경우 2010년에 특수보육 실시 보육소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15,533개소, 일시보육 7,651개소, 휴일보육 927개소, 야간보육소 77개소, 병아보육 1,164개소 등으로 전체 인가보육소 중 4.9%를 차지함

〈표 3-26〉 일본 특수보육 실시 보육소 수, 2010

(단위: 개소, %)

구 분	시간연장형	일시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소	병아(후)보육	전체 인가 보육소 대비
실시보육소 수	15,533	7,651	927	77	1,164	4.9%

자료: 日本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2011). 2010 保育白書

□ 목표치 추정

- 우리나라에서 종일제 돌봄 유치원은 2010년 175개소를 운영하였고, 2011년에는 19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시간연장형 시설은 2010년 6,843개소로 전년 대비 37.7% 증가하였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32,835명으로 전년 대비 37.6% (23,871명) 증가하였음
- 시간연장 인건비 지원대상은 2010년 6천명(408억원)에서 2011년 1만 명(536억원)으로 증가함
 - 이는 기존 월급형태의 인건비 지원 방식 외에 근무수당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등 인건비 지원방식 다양화 및 지원확대를 통해 시간연장보육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임

〈표 3-27〉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0	2011
종일제 돌봄 유치원(개소)	175	191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개소)	6,843	10,000
시간연장 아동수(명)	32,835	37,000

자료: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앞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의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필요성)는 최대 34.9%이며, 이러한 수요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5년에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매년 3% 포인트씩 증가할 필요가 있음

〈표 3-2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목표(안)

(단위: 개소,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종일돌봄유치원	191	217	243	269	29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10,000	11,364	12,727	14,091	15,455
소계	10,191	11,581	12,970	14,360	15,750
전체 대비 비율	22%	25%	28%	31%	34%

주: 어린이집 38021개소, 유치원 8424개소로 총 46,445개소임

[A13]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가. 성과지표 선정

-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시설보육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 왔음
- 그러나 정형화된 시설보육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음

- 파견보육서비스를 제도화한 국가는 없으나, 몇몇 국가들은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프랑스는 가사 고용 보육도우미 비용을 지원
 - 일본 베이비시터협회에 따르면 약 3만명 정도의 전문 베이비시터가 활동 중
- 시설보육의 틈새에 2000년을 전후하여 가정내 보육서비스가 영리, 비영리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정부가 시간제 가정내 보육(in home care)으로 아이돌보미를 시간제 보육으로 도입하였음
 - 이후 종일 영아돌봄으로 확대되어 시설보육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육 수요를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는 육아지원의 다양성 확보,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등을 측정할 수 있어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노력의 성과지표로 대표성을 가짐

【산식 및 이용자료】

-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
- 이용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그 동안 해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였는데, 주된 이유로는 저소득층 이용 시 지원금의 조기 소진으로 하반기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연계건수는 2009년 95만건, 2010년 123만건으로 급격한 증가
 -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연계한 건수 및 가정 수를 보면 2010년에 14만4천가정에서 123만4천여건의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음

- 이용 유형별로는 약 58%가 가형이며, 13%가 나형이고, 27%가 다형
- 2010년에 도입한 신규 영아 종일 돌봄은 당해연도에 482건임
- 2011년 연계건수가 135만건으로 확대되고, 맞벌이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 내 “시간제 양육·학습 및 긴급 돌봄” 지원도 2010년 1만명에서 2011년 3만명으로 증가 예정
-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영아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영아 종일 돌봄”은 시행 첫해인 2010년에 57%가 소득 하위 50% 이하이고, 32%는 소득하위 70% 이상
- 2011년에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에서 70%(480만원)로 조정

〈표 3-29〉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가구 유형별 이용 실적(월별 누적)

(단위: 가구, 건, %)

구 분		연계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2009	누계	62,248	20,048	16,867	99,163	668,229	148,010	135,615	951,854
	비율	62.77	20.22	17.01	100.0	70.20	15.55	14.25	100.0
2010	누계	80,786	22,788	40,486	144,060	737,550	160,056	336,904	1,234,510
	비율	56.08	15.82	28.10	100.0	59.74	12.97	27.29	100.0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단(2011).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표 3-30〉 연령별 돌봄 서비스 가구 유형별 이용 실적(월별 누적)

(단위: 가구, 건, %)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8세	만9세- 12세	계
2009	누계	147,759	222,424	181,965	145,853	123,145	121,508	242,443	95,325	1,280,458
	비율	11.54	17.37	14.21	11.39	9.62	9.49	18.93	7.44	100.0
2010	누계	115,393	260,560	255,170	217,117	186,280	164,052	360,489	138,888	1,697,949
	비율	6.80	15.35	15.03	12.79	10.97	9.66	21.23	8.18	100.0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단(2011).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아이돌보미 시간제 파견보육은 사업 시작 이후 연계 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일정 규모까지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이를 위하여 정부가 관련 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업 실시 기관도 확대할 계획임
- 즉, 2015년에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는 2013년부터 매년 약 10%씩 증가한 180만건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표 3-3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 목표(안)

(단위: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135만	135만	149만	164만	180만

[A14]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수(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가. 성과지표 선정

- ☐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 체험활동, 특기·적성 교육, 급식, 상담, 생활 관리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방과후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돌봄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비스 지원체계 내실화 및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대부분의 선진국은 육아지원기관 유형의 하나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 운영함
- 스웨덴 레저타임센터에는 초등저학년 아동의 약 80%가 등록하고 있으며, 호주도 종일제 보육시설 수 만큼의 방과후 어린이집이 설치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양과 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동수'는 육아지원의 다양성 확보,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노력의 성과지표로 대표성을 가짐

【산식 및 이용자료】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동수 = 초등돌봄 이용 이동수 + 지역아동센터 이용 이동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이동수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통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여성가족부 통계

나. 목표치 산정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동수 추이

-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지원 확대로 2,946개소에 아동복지교사 2,700명을 파견하였고 2011년 3,260개소로 확대됨
 - 센터 당 일일 이동수 평균은 29명으로 추정
- 청소년 아카데미는 학교 밖 생활권 청소년시설로 2010년 161개소 6,762명에서 2011년 200개소 8,400명 수혜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232개소로 확대 추진하여 아동이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학습위주의 교육이 아닌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초등돌봄교실은 2010년 전국 5,851개 초등학교 중 5,177개교(88.4%)에서 6,200개가 운영되어 전체 초등학생 약 330만명의 3%에 해당하는 104,496명이 이용하였음(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13%, 맞벌이 62%, 기타 25%로 구성됨)
 - 2011년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5,722개소, 온종일 돌봄교실 1,000개소로 총 6,722개소로 확대됨

〈표 3-32〉 방과후 프로그램 실적

(단위: 개소, 명)

	2010년	2011년
지역아동센터		
개소	2,946	3,260
수혜 아동수(추정)	85,450(추정)	95,000(추정)
초등돌봄		
교실	6,200	6,722(온종일 돌봄교실 1,000개소 포함)
수혜 아동수	104,496	113,400(추정)
청소년 아카데미		
개소	161	200
수혜 아동수	6,762	8,400
수혜아동 계	196,708	216,800

자료: 보건복지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상 목표치를 기준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아동수의 목표치를 추정함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는 매년 약 5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함
 - 초등돌봄 이용 아동수는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청소년 아카데미 이용 아동수는 2013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의 목표치는 2011년 217천명, 2012년 229천명, 2013년 242천명, 2014년 257천명, 2015년 271천명으로 설정할 수 있음

〈표 3-3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수 목표(안)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역아동센터	95,000	95,000	95,500	96,000	95,500
초등돌봄	113,400	124,700	137,200	150,900	166,000
청소년 아카데미	8,400	9,100	9,700	9,700	9,700
계	216,800	228,800	242,400	256,600	271,200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A15]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가. 성과지표 선정

- 2010년 만12세 이하의 빈곤아동은 54만명으로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은 아동의 생태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빈곤아동과 다양한 생태체계(오정수·정익중, 2008)
 - 빈곤과 아동개인 (빈곤 → 인지능력을 자극하는 자원부족 → 인지능력의 부족 → 정보처리 단계상의 문제 → 반사회적 행동, 비행, 낮은 학업성취)
 - 빈곤과 가정생활 (빈곤 →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증적 증후 → 가족갈등, 양육방식의 문제(지도감독의 부족, 가혹한 훈육 등) → 아동학대, 방임 → 반사회적 행동, 비행, 낮은 학업성취)
 - 빈곤과 학교생활 (빈곤 → 낮은 인지능력, 높은 공격성 → 또래집단에서의 소외 → 비행또래집단과의 교제 → 반사회적 행동, 비행, 낮은 학업성취)
- 향후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사회의 성장환경이 건전하게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됨
 -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발달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탈아동 빈곤정책에서 결핍된 것을 보완하려는 정책이 시도되었음
 - 아동빈곤을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동의 통합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됨

- 취약계층아동 대상 통합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드림스타트 같은 통합적 서비스 지원은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

【산식 및 이용자료】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 $\text{드림스타트 수혜아동수} \div \text{취약계층 아동수} \times 100(\%)$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2000년 이후 빈곤 이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혜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 통합적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지자체 및 드림스타트센터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드림스타트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민간(위스타트 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We Start’를 진행하고 있으나 3개의 사업을 합치더라도 0~12세 빈곤아동밀집지역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혜율은 8.9%에 불과(김미숙, 2008)
 - 현재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의 수혜율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종료시점인 2010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3.1만 명으로 약 7%수준에 불과
- 선진국에서는 빈곤아동을 위한 대책을 일찍부터 실시하였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의 Head Start와 영국의 Sure Start임(김미숙·배화옥, 2006)
- 미국의 Head Start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취학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중심프로그램을 지원
 - 영국의 Sure Start는 정부 주도하에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

는 대표적 정책으로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

- 선진국의 빈곤가정아동 서비스 지원 수혜율은 미국 Head Start 20.2%, 영국 Sure Start 119.6%로 아주 높게 나타남(이완정·권혜진·양성은, 2009)
-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취약계층아동의 통합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적 서비스 지원은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현재 우리나라 빈곤아동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 수혜율은 외국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노력이 필요함
- 2030년까지 빈곤아동 모두(100%)가 통합서비스를 수혜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영국의 Sure Start는 1998년 시작 이래 약 10년만에 모든 취약계층의 아동이 수혜를 받음
 -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모든 취약계층 아동들을 포함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2000년 시작 이래 약 30년이 소요된 2030년에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2015년 30%, 2020년 53%, 2025년 76%, 2030년 100%의 흐름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함
- 즉, 제2차 기본계획 종료시점인 2015년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은 현재의 증가속도를 유지하여 전체 빈곤아동 중 30%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3-34〉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목표(안)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11	15	20	25	30

[A16]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수(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가. 성과지표 선정

- 아동·청소년인구의 지속인 감소를 보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역량을 강화해야하는 필요성이 증대됨
 - 아동·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글로벌 활동이나 문화체험 등의 기회 제공이나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통해 사회 문화적 역량 강화 필요
 -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포함(청소년기본법 제3조 3항)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소질과 창의성을 계발 할 수 있는 기회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
 -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나 주말 등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수에 비하여 부족

※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및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사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임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특히, 청소년들의 활동에 있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시설 확충, 공간 확충 등이 필요(윤준선·유보영, 2010; 유진이, 2010; 윤준선·

정현균·김지훈, 2009)

- 이를 위해 더 많은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지역간 균형 속에서 확충되어야 하며 접근성, 편리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의 활동을 증가시켜야 함
-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치되고 있는 수련시설은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수련시설 수’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

【산식 및 이용자료】

- 청소년 수련시설 수
- 이용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청소년 수련시설은 1992년 이전 전국에 15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601개, 2006년 633개, 2007년 668개, 2008년 690개, 2009년 707개, 2010년 721개소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3-3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추이(누적)

(단위: 개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601	633	668	690	707	721
공공	377	413	410	432	446	464
민간	224	220	258	258	261	257

자료: 청소년수련시설현황조사결과(2011년3월)

- 2010년 기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721개소의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의 집이 216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련원 174개소, 수련관 168개소, 유스호스텔 116개소, 야영장 41개임

〈표 3-36〉 2010년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설치현황

(단위: 개소)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아영장	유스호스텔
계	721	168	216	174	41	116
공공	464	165	213	43	25	12
민간	257	3	3	131	16	104

자료: 청소년수련시설현황조사결과(2011년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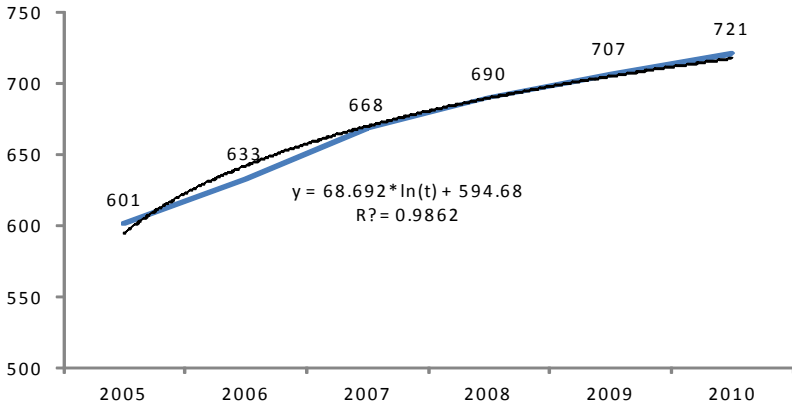
-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련시설 같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수련시설, 문화시설 등이 많이 운영되고 있음(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¹⁾
- 서독의 경우 ‘열려진 문호의 집’ 혹은 ‘청소년 여가의 홈’ 등으로 불리는 여가시설이 서독전역에 1,148개소가 있으며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현장학습적 목표를 지닌 ‘유스호스텔’이 서독 각지에 670개소가 있음. 또한 ‘청소년 홈’으로 가까운 친구들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로 소형 청소년 여가시설이 서독 전역에 4,170개가 있음. 위에서 언급된 시설 수만 5,988개소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불리는 문화활동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전국에 1,200개 정도로 음악연주실, 회의실, 오락실, 공작실, 양재실, 요리실, 유도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교양 어학 등의 활동도 가능함. 그 외에도 ‘농촌회관’, ‘지방체육 스포츠센터’, ‘휴가코로니’ 등의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은 1992년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우리나라 시설 수는 외국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 수련시설을 과거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필요
 - 과거 청소년 수련시설 수의 log-lineal 추세식($R^2=0.986$)을 적용하여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5). 세계의 청소년 교양문화복지시설

목표치 추정

- 그 결과 2015년까지 현재 721개소에서 약 5%(40개소)가 더 늘어난 760개소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그림 3-5]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 추정식



〈표 3-3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청소년 수련시설(누적) 목표(안)

(단위: 개소)

	2011	2012	2013	2014	2015
청소년 수련시설 수	728	738	746	753	760

[A17]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가. 성과지표 선정

- 국민의 안전한 삶의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동안전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 전 세계를 통하여 사고는 아동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인으로, 어

는 다른 질병보다 아동의 생명에 위협적으로 존재

-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원인 1순위는 사고사임(김혜금, 2010)

○ 아동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고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지게 함(오정수·정익중, 2008)

□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타당함

【산식 및 이용자료】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0\sim 14\text{세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 \div 0\sim 14\text{세 아동수} \times 100,000$
- 이용자료: e-나라지표

나. 목표치 산정

□ 통계청(2009)의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0~14세 아동의 사망사고 8,180건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440건으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5.4(아동 10만명당)임

○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아동의 수는 사망 아동수에 비해 약 10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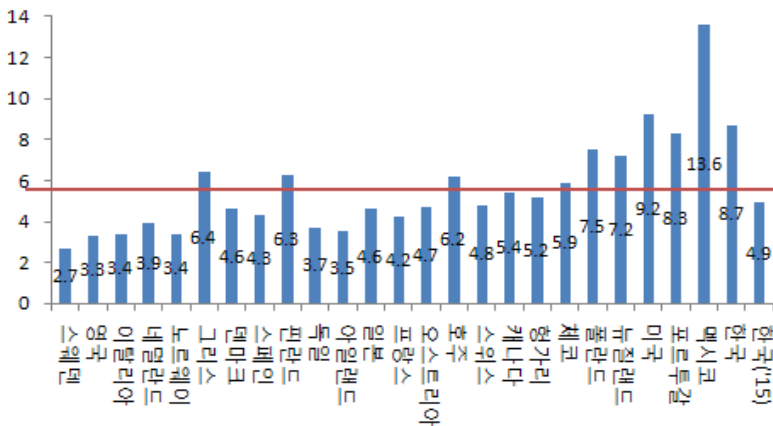
-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고는 아동에게 한번 발생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 슬픔, 괴로움과 부담을 줌(김신정, 2010)

○ 한 해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사회적 손실비용은 2조 136억 원이며, 이는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약 16억 8천만원의 노동력 손실

을 초래함(보건복지포럼, 2007)

- 우리나라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2005년 8.2명(OECD 국가들 중 하위 3위)에서 2009년 5.4명으로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늦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사망률을 더욱 감소 시켜야 함
- 예로, 2005년 기준으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스웨덴 2.7명, 영국 3.3명, 일본 4.6명 등(OECD 평균 5.6명)
- 우리나라의 2009년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이 4년 전인 2005년도 OECD 국가의 평균수준과 유사함

[그림 3-6] OECD 국가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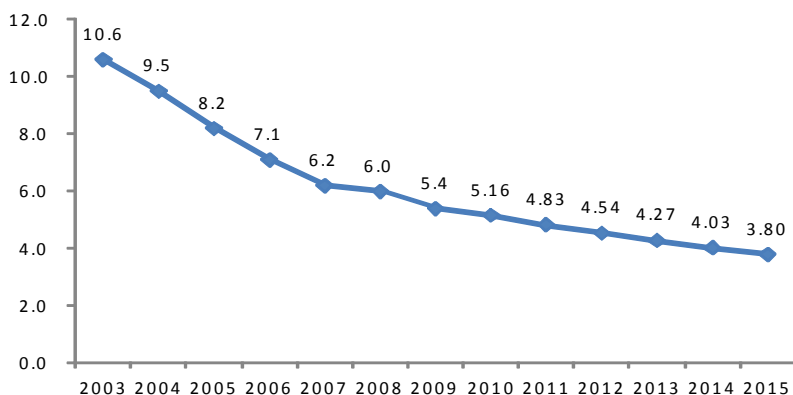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09)

-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나라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추정함
- 추정식(아동안전사고사망률) = $-2.798 \times \text{LN}(\text{연도}) + 10.98$
($R^2=97.6\%$)
- 이 추정식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2011년 4.83명, 2012년 4.54명, 2013년 4.27명, 2014년 4.03명, 2015년 3.80명

으로 낮아질 것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의 2015년 목표치는 2005년 OECD 국가 중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스웨덴 2.7명, 영국 3.3명, 일본 4.6명의 평균인 3.54명에 근접함

[그림 3-7]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추이 및 향후 목표, 2003-2015



자료 : 2003~2009년 자료는 e-나라지표 홈페이지

〈표 3-3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목표(안)

(단위: 10만명 당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동안전사고사망률	4.83	4.54	4.27	4.03	3.80

[A18]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가. 성과지표 선정

- 아동기에 경험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아동발달 과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그 부정적 영향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가장 큰 사회적 위험 중에 하나임(오정수·정익중, 2008)

-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의 결과이며, 이후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대처 활동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옴(김형모, 2011)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동 기간 2,105건에서 5,657건으로 지난 10년간 2.7배 증가
 - 이는 아동학대 발생률의 증가라기보다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1년 17개소에서 2010년 44개소로 증설되어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게된 것으로 판단됨(보건복지부, 2010)
-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현 노력은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함
-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타당함

【산식 및 이용자료】

-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 $0\sim 17\text{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div 0\sim 17\text{세 아동수} \times 1,000(\%)$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목표치 산정

- 보건복지부(2011)의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가 2001년 2,105건에서 2009년 5,68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5,657건으로 약간 감소됨
- 이러한 수치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 중 일부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보호되었다고 할 수 있음

〈표 3-39〉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단위: 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신체학대	476	254	347	364	423	439	473	422	338	348
정서학대	114	184	207	350	512	604	589	683	778	773
성학대	86	65	134	177	206	249	266	284	274	258
방임	672	814	965	1,367	1,635	2,035	2,107	2,237	2,025	1,870
유기	134	212	113	125	147	76	59	57	32	14
중복학대	623	949	1,155	1,508	1,710	1,799	2,087	1,895	2,238	2,394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0.

- 아동인구(만0~17세)는 계속 감소하나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인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2001년 0.18%에서 2010년 0.57%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수준은 아동학대예방정책의 효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이 높아진 미국의 10.6%(2007년)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3-40〉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추이

(단위: 천명,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추계아동인구	11,872	11,666	11,479	11,298	11,105	10,904	10,705	10,491	10,247	9,976
아동학대사례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학대피해아동보호율	0.18	0.21	0.25	0.34	0.42	0.48	0.52	0.53	0.55	0.57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0

- 현재 우리나라의 매우 낮은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아동학대사례가 적은 것이 아니라 실제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 중 일부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보호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아동학대 사례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을 2030년까지 미국 수준(약 10%)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을 2015년 3.0%, 2020년 5.5%, 2025년 8.0%, 2030년 10.5%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연도별 목표치는 매년 0.5%p 씩 증가시켜 2011년 1.0%에서 2015년 3.0%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표 3-4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학대피해아동보호율 목표(안)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1.0	1.5	2.0	2.5	3.0

제3절 고령사회부문 성과지표 및 목표치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B1]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가. 성과지표 선정

- ☐ 50대 이후 급격한 소득수준 하락과 복지부담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50대 경제활동참가율 증대를 통하여 일하는 50세 이상 세대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당면 과제임
-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성으로 인하여 고령자의 고용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 따라서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고령층에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령자취업률’은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타당함

【산식 및 이용자료】

- 고령자취업률 = $55\sim64\text{세 고용자수} \div 55\sim64\text{세 인구} \times 100(\%)$
- 이용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목표치 산정

- ☐ OECD 선진국(평균 53.4%)에 비하여 낮은 고용률은 아니지만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의 상대적인 취약성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볼 때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령자 고용률 증대가 요구됨
- 우리와 유사한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나 OECD 국가 중 사회보장 시스템이 취약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55~64세군의

고용률이 증대하여 왔음

- 일본의 경우 2000년의 62.7%에서 2007년 66.1%로, 미국의 경우 동기간중 57.8%에서 61.8%로 증대하였음

□ IMF 위기 이후 급감하였던 고령자 고용률이 서서히 회복하여 최근 60%대의 고령자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2010년에는 60.9%로 2007~2009년의 60.6%에 비하여 0.3%포인트 증가하였음

〈표 3-42〉 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단위: %)

	1997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 고용률(55-64세)	63.8	57.8	58.7	59.3	60.6	60.6	60.6	6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3-43〉 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국제비교

(단위: %)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2000	65.1	37.6	62.7	57.8
2005	69.6	45.5	63.9	60.8
2007	70.1	51.3	66.1	61.8

자료: <http://stats.oecd.org>

□ 지금까지 지속적인 고령자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고령자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증가속도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

- 그 경우 연도별 고령자고용률 목표치는 2011년 61.2%에서 2015년 62.4%로 상승

〈표 3-4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고령자 고용률(55-64세) 목표(안)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고령자 (55-64세)고용률(%)	61.2	61.5	61.8	62.1	62.4

[B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 중 50세이상 비율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가. 성과지표 선정

- ☐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많은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서 고령자를 배제하거나 고령자가 배제당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고령자에게는 훈련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 반면,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사업은 중고령자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훈련사업으로서, 고령자에 특화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정 기간 취업능력향상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
 - 단순 일자리 및 현장 연수 중심의 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전문직종으로 내실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훈련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훈련 수요를 파악한 후 중고령자 전담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직무훈련과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의 현장연수를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
- ☐ 그러나 2011년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하여 운영중임
 - 지원대상자가 저소득(유형1), 청년(유형2), 훈련(유형3), 기타(유형4)로 나누어 설정되어 있으며, 유형2를 제외하고는 64세 연령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에 비하여 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특화된 전략이 약화될 가능성도 내재함
 -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중 50세 이상의 비율’을 통하여 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관심 정도를 측정할 필요성이 높음

【산식 및 이용자료】

-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수/취업성공패키지 전연령 지원자수)×100
- 이용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실적자료

나. 목표치 산정

- 2011년부터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통합되어 운영중이므로 목표치를 선정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
- 따라서 2011년을 기점으로 하여 매년 전년도에 5%씩 증대해가는 것으로 목표 설정

〈표 3-45〉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실적

(단위: 명, %)

	계획인원	참여인원	취업인원(취업률)
2007년	900	328	45(17.1)
2008년	855	802	222(31.9)
2009년	700	649	308(53.4)

자료: 고용노동부(2010), 고용보험백서.

〈표 3-4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중 50세 이상의 비율 목표(안)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50세이상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자수	*%	2011년의 5% 증대	2012년의 5% 증대	2013년의 5% 증대	2014년의 5% 증대

[B3] 국민연금가입률(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가. 성과지표 선정

- ☐ 당연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구분되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 구조 하에서
는 국민연금 가입율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2010년 8월 현재 18세 이상 59세 이하 인구 3,200여만명 중 국민연
금 당연가입자가 1,866만명, 적용제외자가 1,350만명에 달하고 있음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는 소득신고자 1,342만명과 납부예외자 524만명으
로 구성되어 있음
 - 납부예외자는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 중 상당수
가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1,350만명은 타 공적연금 가입자, 학생 및
군인, 무소득 배우자로 구성됨
 - 그러나 무소득 배우자로 분류된 859만명의 일부가 실제로는 소득활동
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 정책당국의 노력을 통해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가 가능한 대
상은 납부예외자 중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는 자와 무소득배우자 중 실
제로 소득활동을 하는 자임
 - 납부예외자 중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는 자의 상당수가 건설 일용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가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 따라서 ‘국민연금가입률’은 고령사회대비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
립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타당

【산식 및 이용자료】

- 국민연금가입률 = 국민연금 가입자수 ÷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부여되는 18세 이상 59세 이하 인구 × 100(%)
- 이용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

나. 목표치 산정

- 별다른 정책적 요인없이 현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 18~59세 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수 비율은 60%에 달할 전망이다

〈표 3-47〉 18세~59세 인구수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수 전망

(단위: 천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수 ¹⁾ (가)	31,504	31,616	31,685	31,698	31,629
국민연금 가입자수 ¹⁾ (나)	18,838	18,919	18,975	18,997	18,992
(나 / 가)	59.8%	59.8%	59.9%	59.9%	60.0%

주: 1) 18세~59세 인구수 및 국민연금 가입자수

자료: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인구 및 제도변수관련 가정을 토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정한 자료임.

- 건설일용직,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고 도입을 통한 가입율 제고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가입률이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 2015년 국민연금 가입률을 현재의 추정치 보다 5%포인트 높은 65%로 설정할 수 있음
 - 이러한 목표치는 2015년 한 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현 추세가정 국민연금가입률보다 매년 1%포인트씩 높아지도록 목표를 설정함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가입률은 2011년 60.8%, 2012년 61.8%, 2013년 62.9%, 2014년 63.9%, 2015년 65.0%로 설정함

〈표 3-4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국민연금가입률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민연금가입률(%)	60.8	61.8	62.9	63.9	65.0

[B4] 퇴직연금 가입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가. 성과지표 선정

-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0년 12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액이 29조 1,47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3.5%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적립금규모 및 가입율 면에서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역할 또한 미흡함
- 그 원인으로는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 계약형 지배구조의 한계, 수급권 보호장치 미흡, 연금전환대책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률(전체 상용근로자 대비)은 고령사회대비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타당함

【산식 및 이용자료】

- 퇴직연금 가입률 =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자) ÷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100(%)
- 이용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통계

나. 목표치 산정

-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기준)이 2008년말 16.4%에서 2009년말 32.5%로 급격히 증가 후 2011년 8월말까지

3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음

〈표 3-49〉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추이

	2008.12월말	2009.12월말	2010.12월말	2011.8월말
퇴직연금 가입률(%)	16.4	32.5	30.0	35.3

〈표 3-50〉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2011년 12월말)

(단위: 개소, %)

구 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①도입사업장수	50,052	27,213	12,700	3,323	583	629
②전체사업장수	1,204,919	157,952	47,529	9,460	1,330	1,071
비율(①/②)(%)	4.2%	17.2%	26.7%	35.1%	40.5%	58.7%

□ 다수 국가(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가 90%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약 47%, 제일 낮은 수준을 보이는 멕시코의 경우도 31%에 달하고 있음

〈표 3-51〉 퇴직연금 가입형태의 국제비교

국가	제도형태	가입률	보험료율
호주	MO/P	> 90%	9%
덴마크	MP	> 90%	1%
헝가리	MP	58%	8%
아이슬란드	MO	> 90%	10%
멕시코	MP	31%	6.275%
네덜란드	QMO	> 90%	-
노르웨이	MO	> 90%	2%
폴란드	MP	49%	7.3%
슬로바키아	MP	45%	9%
스웨덴	MP	> 90%	2.5%
스위스	MO	> 90%	7~18%
영국	VO	43%	9%
미국	VO	47%	9%
캐나다	VO	39%	8.5%

주: M=강제가입, V=임의가입, QM=반강제가입, O=기입, P=개인

자료: OECD(2008). *Pensions at a Glance*.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도입초기인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퇴직연금 가입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측에 어려움 존재
 - 2008~2009년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급격한 증가 이후 2010년에는 다소 낮아졌으며, 2011년 8월말 다시 증가하는 등 예측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5년까지 미국이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인 45%를 달성할 것으로 목표로 설정함
 -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률 목표치는 2011년 35.0%에서 2015년 45.0%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설정

〈표 3-5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퇴직연금 가입률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퇴직연금 가입률(%)	35.0	38.0	41.0	43.0	45.0

[B5]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가. 성과지표 선정

-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핵심임
 - 건강검진 수검자가 미수검자에 비해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평균 의료비, 치료 유병률이 낮고, 사망률도 낮음(최용준 외, 2008)
 - 건강검진 정기 수검군에 비해 미수검군이 장기간 의료비 지출 2배 이상, 평균 입원일수 약 2배(지선하 외, 2005)
- 일반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 중 대상자의 포괄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을 사전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타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대상인 베이비붐 이상 세대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지표를 선정하도록 함

【산식 및 이용자료】

- 45세이상 건강검진수검률 = (건강검진 수검자÷건강검진대상자)×100(%)
- 이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나. 목표치 산정

- 국가 건강검진 사업은 ① 일반건강검진, ②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③ 영유아 건강검진, ④ 암검진의 4가지 사업이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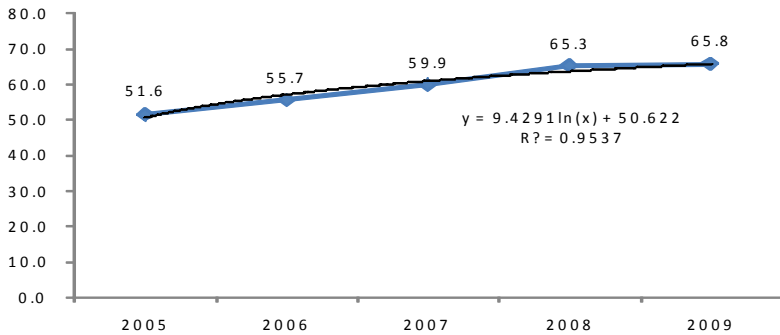
〈표 3-53〉 국민 건강검진 사업 특성 비교

구분		목표질환	검진대상(2009)		검진항목
일반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장, 신장, 빈혈, 폐결핵, 기타흉부질환, 구강질환, 치매	1,628만명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차)진찰 및 상담 등 22개 항목 -(2차)3개 질환 6항목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 골다공증, 치매, 우울증	124만명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40세인 자 ·만66세인 자	-(1차)24개 항목 -(2차)결과상담, 건강 위험평가, 생활습관 평가, 정신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발달이상, 청각·시각이상, 영양과잉·결핍 등	235만명	-4개월부터 60개월 전체 영유아 ·4,9,18,30개월, 5세	-신체계측 및 진찰, 발달선별평가상담, 건 강교육, 구강검진
암 검 진	암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1,230만명	-일반검진대상자 중 ·위: 유방 간 40세이상 ·대장: 50세이상 ·자궁: 30세이상	-5대 암종별, 단계별 검진
	국가암 조기 검진		691만명	-암진진 대상자 중 보 험료하위 50% ·지역: 72,000원 ·직장: 60,000원	-5대 암종별, 단계별 검진

자료: 윤영덕 외(2010). 『일반건강검진사업의 효과 평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전체 20세 이상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3.6%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건강검진 수검률의 정체는 일정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나타나는 증가율 감소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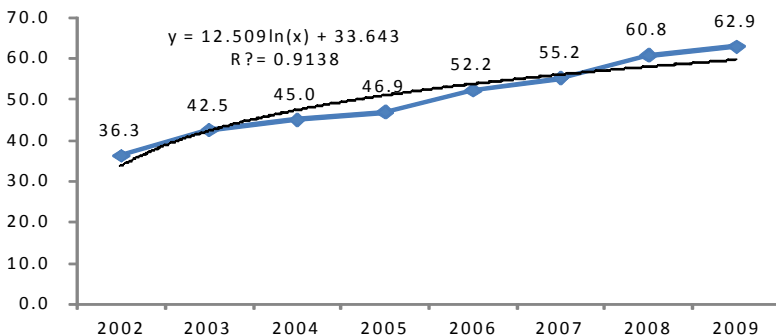
[그림 3-8] 우리나라 건강검진 수검률(%)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년도

- 이중 45세 이상 베이비부머와 노인의 수검률은 이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9년 45세 이상자의 62.9%가 일반건강검진 수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과거 5년간(2005~2009년) 수검률이 매년 평균 3.2% 증가한 것임

[그림 3-9] 우리나라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년도

□ 외국의 건강검진 수검률(암검진율)을 살펴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82.1%이며, 노르웨이, 영국 및 아일랜드는 70% 수준으로 나타남

〈표 3-54〉 국가별 건강검진(암) 검진율 비교

(단위: %)

국가	2008	2009
덴마크	73.7	
프랑스	54.5	..
아일랜드	75.0	73.1
이탈리아	60.0	60.0
룩셈부르크	64.5	61.0
네덜란드	82.6	82.1
뉴질랜드	63.4	66.9
노르웨이	75.3	74.1
영국	73.7	74.0

자료: OECD 통계.

- 이들 국가는 대부분 의료체계에서 보편적 의료를 적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줌
 - 이들 국가의 건강검진 수검율 평균은 2008년 69.2%, 2009년 70.2%
- 일본(일본 특정건강검진·특정 보건지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9)에 의하면 특정건강검진 목표수검율은 2012년 70.0%, 2015년 80.0%로 설정(수검을 할 수 없는 자, 수검을 희망하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에 80% 정도를 한계치로 설정).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1)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지표인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은 과거 약 5년간 급속히 증가를 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5년간의 건강검진 수검률의 목표는 과거 5년간(2005년-2009년)의 수검률 증가 추이의 수준으로 하여, 2015년의 목표치는 72.4%로 함

- 목표설정값은 지난 5년간의 45세 이상 건강검진수검률의 추세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설정함

〈표 3-5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45세 이상 고령자 건강검진 수검률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건강검진 수검률(%)	67.4	68.9	70.2	71.4	72.4

[B6] 50-64세 국민 노후준비율(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가. 성과지표 선정

- ☐ 제2차 기본계획을 계기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정책으로서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설계 강화” 과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노후설계 기반조성’과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됨
- ☐ 실제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18세 이상 국민의 66.3%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2005년도 52.3%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한 것임
 -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대부분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 국민의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 뿐 아니라 건강, 여가, 재무, 대인관계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설계와 준비가 중요함
 - 그러나 아직 다차원적 노후준비에 관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50~64세 국민 노후준비율’은 성과지표로 타당
 - 노후준비는 특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노년기 직전단계인 50세 이후(50~64세)에는 전 국민이 노후에 대해 준비해야 함을 의미함
 - 이용자료로는 통계청 사회조사이나,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경제적 노후준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따라서 연도별 다차원적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예로 통계청 사회조사 보완, 별도 서베이 실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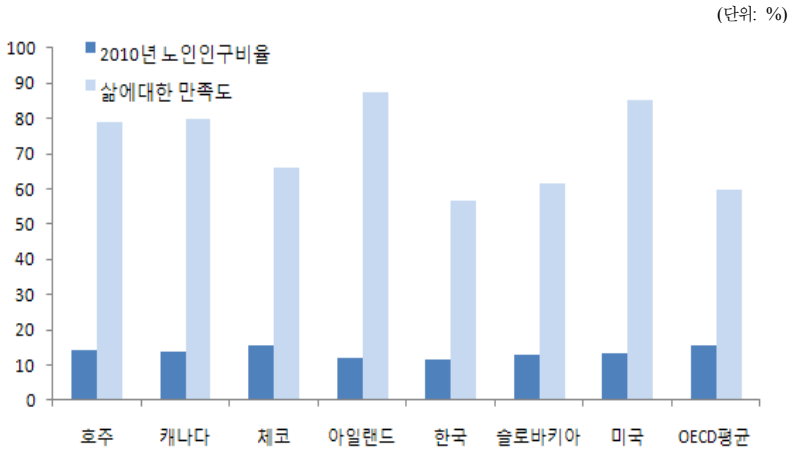
【산식 및 이용자료】

- $50\sim64\text{세 국민 노후준비율} = 50\sim64\text{세 노후준비 응답자} \div 50\sim64\text{세 인구} \times 100(\%)$
- 이용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나. 목표치 산정

-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 등 영미권 국가의 경우 노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모두 79%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6.8%에 불과함
 - 이처럼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노년기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준비정도가 낮기 때문임

[그림 3-10] OECD 국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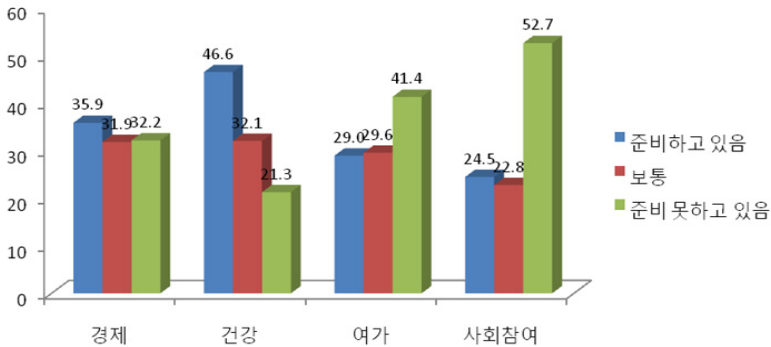


자료: Labour Force Statistic 2008, OECD Factbook 2008, Society at a Glance 2006, The World Values Survey, wave 1999-2004

□ 우리나라의 관련 자료 분석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준비율은 1998년 25.0%에서 2004년 28.3%, 2008년 37.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미 노년기에 도달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중장년층 대상 분야별 노후준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이소정 외, 2010), 건강과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율이 높은 편이나 적절한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삶의 제 영역별 노후준비는 경제적 노후준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그림 3-11] 우리나라 중장년층(45~64세)의 영역별 노후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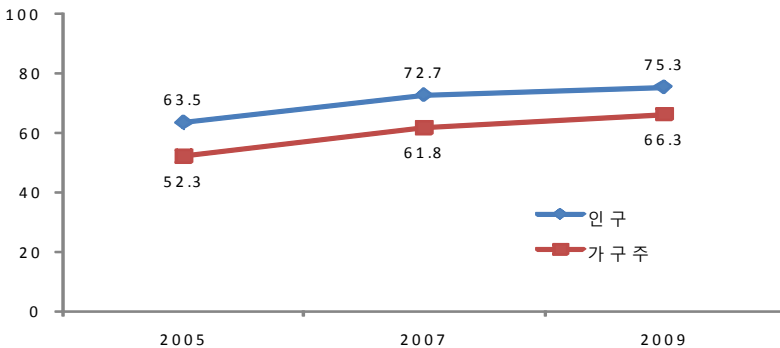


자료: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2010)

□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국민의 노후준비도는 2005년 52.3%에서 2007년 61.8%, 2009년 66.3%로 증가하였음

○ 18세 이상 국민의 노후준비율은 2005~2009년 간에 연평균 3.5%포인트씩, 2007~2009년 간에는 연평균 2.25%포인트씩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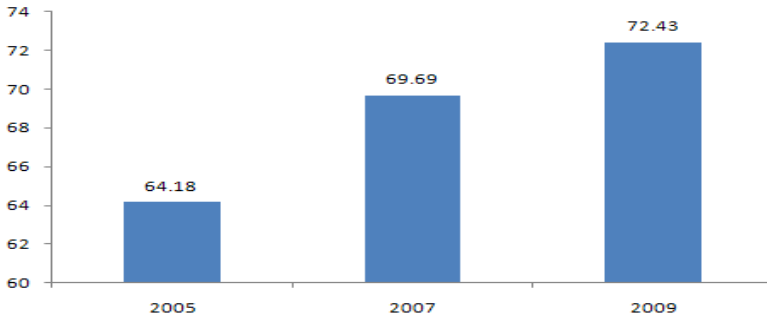
[그림 3-12] 우리나라 18세 이상 국민의 노후준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노년기 직전 단계인 50~64세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2005년 64.18%에서 2007년 67.69%, 2009년 72.43%로 2005~2009년 간 연평균 2.1%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50~64세 국민의 노후준비율(%) 추이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향후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최근의 노후준비 추세(18세 이상 국민 연평균 2.25%포인트, 50~64세 국민 연평균 2.1%포인트 증가)를 지속시킬 것으로 가정하면, 50~64세 국민의 노후준비율의 목표치는 연간 2%포인트씩 상승하여 2015년까지 84%에 도달할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연도별 목표치는 2011년 76%, 2012년 78%, 2013년 80%, 2014년 82%, 2015년 84%로 설정함

〈표 3-5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50~64세 국민 노후준비율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50~64세 국민 노후준비율(%)	76	78	80	82	84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B7] 노인일자리 창출수(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가. 성과지표 선정

-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현재 그리고 단기적 미래의 노인세대는 공적 소득보장체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움

- 게다가 현재 및 단기적 미래의 노인세대는 노후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준비도가 낮은 실정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18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이 66.3%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노후준비율은 39%에 불과
- 이에 반해 노인들의 근로 욕구가 높은 수준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고령친화적인 노동시장 환경은 보다 큰 차원의 사회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함
 - 따라서 당분간 노인 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개발해 주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소득보조,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수’가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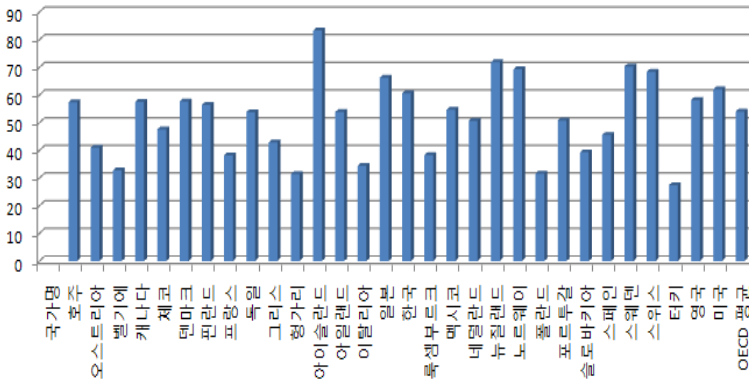
【산식 및 이용자료】

- 노인일자리 창출 수(공공분야 일자리 + 민간분야 일자리)
- 이용자료: 노인일자리사업 행정 DB

나. 목표치 산정

- 우리나라의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60.6%로 OECD 전체 평균 54%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높은 고령자 고용률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노후소득보장 정도가 낮음으로 인해 더 오래 일하려고 하는 효과와 일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의 관습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14] OECD 국가의 55~64세 고령자 고용률(%), 2008



자료: OECD Factbook 2010

- 외국의 경우 노후의 일자리는 주로 정년제도 조정을 통해 보장하거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해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와 같이 노인일자리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정책을 펼치는 사례
는 거의 발견할 수 없음
- 따라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표치는 외국의 사례 및 기준에 근거
하기보다 우리나라의 욕구와 경향성에 근거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건강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여
노인일자리 수요(A+C)는 전체 노인의 11.66%로 2015년에는 총 744,003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Target A 집단은 현재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규모이며 노인실태 조사의 응답 자료에 근거해
추론한 것임
- Target B 집단은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유가 일자리가 없어
서이고 앞으로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 Target C의 경우 현재 일자리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일하지 않고 있
으나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집단

〈표 3-57〉 노인일자리 사업 욕구충족 규모 추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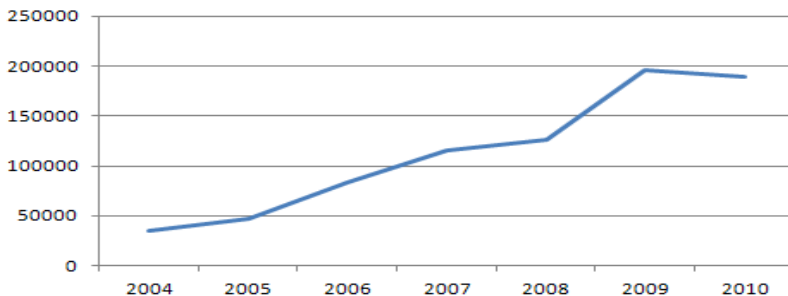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5세이상	5,016,026	5,192,710	5,356,853	5,537,072	5,741,744	5,962,225	6,178,467	6,380,819
TargetA	415,327	429,956	443,547	458,470	475,416	493,672	511,577	528,332
TargetB	135,934	140,722	145,171	150,055	155,601	161,576	167,436	172,920
TargetC	169,542	175,514	181,062	187,153	194,071	201,523	208,832	215,672
TargetA+B	551,261	570,679	588,718	608,524	631,018	655,249	679,014	701,252
TargetA+C	584,869	605,470	624,609	645,623	669,487	695,195	720,409	744,003
TargetA+B	720,803	746,192	769,780	795,677	825,089	856,772	887,846	916,924

자료 : 통계청, 장애인구 추이

노인인력개발원, 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 전체 수요 중 이미 확보된 일자리수(현 55~64세 고용률 60.6% 유지 가정)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창출이 필요한 일자리수는 2015년까지 약 29만 명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추가 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일자리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수행기관 등 인프라의 증가를 수반해야함
 - 2011년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은 1,202개, 전체 사업단 수는 4,932개로 집계. 2011년 현재 창출된 20만의 노인 일자리에 대해 한 개 수행 기관당 평균 166명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음
 - 인프라의 변화가 없다면 노인일자리를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대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음

[그림 3-15] 노인일자리 창출 추이



- 따라서 지금까지 연도별 노인일자리의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연간 2.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여 2015년까지 전체 일자리 규모를 30만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표 3-5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일자리 창출 수 목표(안)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수요(Target A+C)	645,623	669,487	695,195	720,409	744,003
일상공급(고용률 60.6%)	391,248	405,709	421,288	436,568	450,866
추가 창출 필요 일자리	254,375	263,778	273,907	283,841	293,137
연도별 목표치	200,000	225,000	250,000	275,000	300,000

[B8]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 마련)

가. 성과지표 선정

- ☐ 사회보험방식, 즉 근로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속성 상 정책수단 활용을 통하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수급률 제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노동시장에서 대부분 퇴직한 65세 이상 인구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제고는 사실상 불가능함
- 정책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60세 도달 시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가 임의계속 가입하여 10년 수급요건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성과는 ‘65세 이상 인구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의 지표로 측정할 수 있음

【산식 및 이용자료】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 65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인구수 × 100(%)
- 이용자료: 국민연금통계, 추계인구

나. 목표치 산정

-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전망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한 수급자 비율이 31.6%(반환일시금 수급자 제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3-59〉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수 전망

(단위: 천명)

		2011	2012	2013	2014	2015
65세이상 인구수(가)		5,537	5,742	5,962	6,178	6,381
65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수	노령연금(나)	1,297	1,416	1,450	1,585	1,755
	노령+유족연금(다)	1,441	1,575	1,616	1,793	2,017
(나 / 가)		23.4%	24.7%	24.3%	25.6%	27.5%
(다 / 가)		26.0%	27.4%	27.1%	29.0%	31.6%

자료: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인구 및 제도변수관련 가정을 토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정한 자료임.

- 2015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의 목표치를 현 제도 유지시 전망치보다 약 1%포인트 높은 33%로 설정함
- 사회보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속성 상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집단(61~62세 이상 연령층 대상)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을 높이는 노력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 연도별로는 2차 기본계획 초기보다 후반기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가중적으로 목표를 설정함
 -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1년에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 2012년 27.7%, 2013년 27.8%, 2014년 30.1%, 2015년 33.0%

〈표 3-6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65세 이상 인구 국민연금 수급률 목표(안)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65세 이상 인구 국민연금 수급률(%)	26.0	27.7	27.8	30.1	33.0

[B9]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가. 성과지표 선정

- ☐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음
 - 신체적 특성상 의료수요가 많은 중기(75~84세) 및 후기(8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대부분의 치매고령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치매고령자의 증가는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 할 수 있음
- ☐ 치매는 조기 발견을 통해 예방과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견이 늦다는 점으로 인해 치매에 대한 대응이 늦게 이루어짐
 - 따라서 치매의 예방-조기진단 및 치료-보호(케어)와 같은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운영 필요
 - 정부는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을 통해 치매 질환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의 기틀을 마련함
- ☐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를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치매 조기검진은 치매선별검사 - 치매진단검사 - 치매감별검사로 이루어짐. 본 성과지표에서는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자 참여자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함

【산식 및 이용자료】

-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
- 이용자료: 보건소 치매조기검진 사업실적 자료

나. 목표치 산정

- 치매노인의 규모는 후기 고령자의 증가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08년 치매유병률 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8.4%(치매유병률)가 치매노인이며, 2020년에는 노인의 9.7%(치매유병률)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3-61〉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08년	'10년	'11년	'20년	'30년	'40년	'50년
65세 이상 인구 수	5,016	5,357	5,357	7,701	11,811	15,041	16,156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421	469	495	750	1,135	1,685	2,127
치매 유병률(%)	8.4	8.8	8.9	9.7	9.6	11.2	13.2

자료: 「2008년 전국치매유병률 조사」 보건복지부.

-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하여, 2010년까지 총 약 90,000명에 대해 진단 및 감별검사를 실시함
 - 따라서 2011년 기준 치매노인수 493천명에서 90천명을 제외하면, 403천명에 대해 치매 진단을 필요로 함

〈표 3-62〉 연도별 치매노인수 추정

(단위 : 천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65세 이상 노인	5,537	5,742	5,962	6,178	6,381
치매유병률(%)	8.9	9.0	9.1	9.2	9.3
치매노인수 추정	493	517	543	568	593

주 : 2012~2015년 치매유병률은 2011년과 2020년 간 내삽법을 적용하여 추정

- 2011년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목표치는 40천명의 예산이 확보됨. 따라서 2015년까지는 치매노인의 약 50%에 대해 진단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매해 2015년까지 40천명에 대한 치매 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2015년에는 치매 노인수의 약 50%수준인 290천명에 대한 누적 진단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

〈표 3-6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치매 조기검진참여자수(명)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B1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가. 성과지표 선정

-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임
 - 가족형태의 변화 및 노인부양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는 사회가 함께 충족시켜야 할 과제로 인식되며, 따라서 사회보험의 형태로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짐
- ☐ 향후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뿐 아니라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하여 후기고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으로 장기요양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제도의 내실화 등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호의 욕구에 대한 충족 정도를 나타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산식 및 이용자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확정자 ÷ 노인인구 × 100(%)
- 이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나. 목표치 산정

-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자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2008년 214,480명에서 2010년 315,994명으로 확대하여 전체 노인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음

〈표 3-64〉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214,480	286,907	315,994
1등급	57,396	54,368	46,994
2등급	58,387	71,093	73,833
3등급	98,697	161,446	195,167

주 : 연도말 자격기준.

자료 : 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주어지고 그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할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욕구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분법적 논리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적당한 수준에 대한 합의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이 고령화수준과 정책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화 현상을 먼저 겪은 그리고 노인보호에 대한 가족 보호기능이 약한 서구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시설서비스 이용노인은 4.61%, 재가서비스 이용노인은 8.89%로 약 13.5% 수준임

○ 고령화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 욕구(수급자)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령화수준 대비 장기요양수혜율의 비율은 2005년에 일본 0.844(19.9%, 16.8%), 독일 0.582(고령화수준 18.9%, 장기요양수혜율 11.0%)로 일본에서 보다 많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고령화수준 대비 장기요양수혜율의 비율은 0.536(고령화수준 11.0%, 장기요양수혜율 5.9%)로 일본과 독일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3-65〉 국가별 고령화수준 대비 장기요양수혜율의 비율

(단위 : 명)

	독일(2005)	일본(2005)	한국(2010)
도입시기	1995	2000	2008
고령화 수준(A)	18.9	19.9	11.0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B)	11.0	16.8	5.9
B/A	0.582	0.844	0.536

주: 고령화수준은 통계청(KOSIS)

○ 우리나라의 고령화수준 전망치(통계청)에 각국의 고령화수준 대비 장기요양수혜 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고령화 수준 변동에 따라 장기요양수요(수혜율)를 추정할 수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수준을 일본 수준으로 높일 경우 장기요양수혜율은 2015년 10.9%까지 상승하여야 하나, 이는 지나치게 높아 재정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수준으로 높일 경우에는 2015년 장기요양수혜율은 7.5%까지 증가시켜야 할 것임
- 우리나라 현 수준을 유지시킬 경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15년에는 장기요양수혜율이 6.9%로 올라갈 것임

〈표 3-66〉 여러 가정에 따른 장기요양수혜율 추정, 2011~2015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고령화 수준	11.0	11.3	11.7	12.1	12.6	12.9
일본수준(0.844) 적용시	9.3	9.5	9.9	10.2	10.6	10.9
독일수준(0.582) 적용시	6.4	6.6	6.8	7.0	7.3	7.5
한국 현수준(0.536) 유지시	5.9	6.1	6.3	6.5	6.8	6.9

- 위와 같은 추정 결과에 따라, 향후 목표치는 독일 수준으로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까지 7.5%로 설정함

〈표 3-6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장기요양수혜율 목표(안)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6.6	6.8	7.0	7.3	7.5

[B11]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가. 성과지표 선정

- ☐ 노령기의 기초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은 노인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와

질병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필요성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각종 노인병을 예방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여기에는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됨
 - 그러나 통계청의 사회조사(2008)에 따르면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실천률은 33.2%에 불과하여, 노인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긴요함
- 이와 같은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와 관련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노인 생활체육참여율’을 주요한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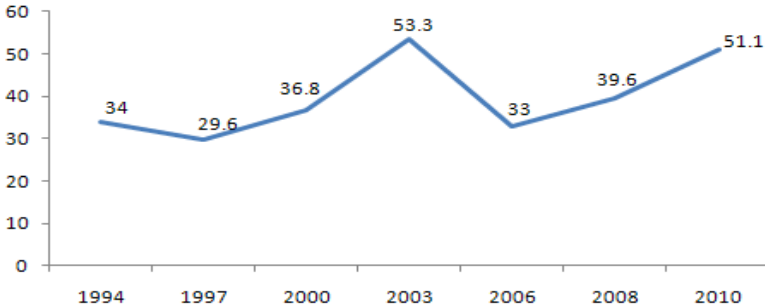
【산식 및 이용자료】

-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체육참여율 = $\frac{\text{생활체육 참여 60세 이상 인구}}{\text{전체 60세 이상 인구}} \times 100(\%)$
- 이용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

나. 목표치 산정

-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체육 참여율 추이는 측정기준의 불일치성 등으로 인하여 심한 불규칙성을 보이고 있음
- 2003년 53.3%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2006년에 33.0%로 감소하였음
 -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 51.1%로 나타남

〈표 3-68〉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체육참여율(%) 추이, 1994~2010



자료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1994~201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체육과학연구원

-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참여율은 국가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 수준은 낮게 나타남
- 외국의 생활체육참여율은 신체활동 기준으로 약 70% 수준임

〈표 3-69〉 국가별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참여율(2010년)

(단위: %)

		1주일 1회 이상	전혀 참여 안함
유럽연합(EU)	스포츠활동	40	39
	신체활동	65	14
호주		70.5	18
뉴질랜드		79	21
미국	스포츠활동	67.5	32.5
	신체활동	75.9	24.1
캐나다		48	52
한국		50.3	45.3

주: 미국의 경우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2010)는 20분 이상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하거나 30분 이상의 저/중강신체활동을 일주일에 5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The 2010 Statistical Abstract(2010)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하루도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또는 격렬한 강도로 하루 20분 이상, 주 3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료: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체육과학연구원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인구)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하여야 함

- 다만, 생활체육 참여율은 인프라 구축, 국민의식 변화, 사회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단시간에 아주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10년 동안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EU연합 평균수준(신체활동)인 65%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1.5%포인트씩 높여야 함
- 구체적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약 7.5%포인트를 높여 2015년에 58%에 이르도록 목표를 설정함

〈표 3-7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체육참여율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체육참여율(%)	51.8	53.3	54.8	56.3	58.0

[B12]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가. 성과지표 선정

-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 통합, 건강, 자아존중감 향상 등의 긍정적 기능이 있어 활성화가 필요함
- 그러나 현 노인은 청장년기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매우 적어 자원봉사 참가율에 있어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가치 뿐 아니라, 복지공급에 있어 정부 의존성을 극복하고 민간의 협력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지역단위의 복지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체계의 구축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등록자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 (사회복지분야)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등록자수
- 이용자료: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DB

나. 목표치 산정

-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저조하며, 특히 고령자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남
 -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2009년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7.0%이며, 65세 이상의 참여율은 5.3%로 낮음
 - 40대에서 18.6%, 50대에서 15.5%로 연령군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 차이가 큼
 - 사회복지 통계연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자수는 6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0.84%로 아주 낮게 나타남
 -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사회복지 부문의 자원봉사활동에 한정되어 작성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경우도 40대와 50대에 비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선진국에서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미국 14.2%, 영국 53.0%, 캐나다 36.0% 등으로 나타남
 - 선진국들은 사회적으로 오래된 자원봉사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수준을 우리나라가 적어도 단기간 내에 달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노인의 1%가 사회복지 부문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활동화

정책을 펴나가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 현재 65세 이상의 자원봉사등록자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고 있지 못함. 사회복지 통계연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자료(60세 이상 0.84%)와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65세 이상 5.3%)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 사회복지 통계연보상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최근 노년층의 자원봉사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65세 이상의 1%를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퇴직노인 자원봉사단 조직·운영, 노인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자원봉사참여율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임
- 이 경우 연도별 노인의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2011년 55천명, 2012년 57천명, 2013년 60천명, 2014년 62천명, 2015년 64천명 달성을 목표로 함

〈표 3-7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사회복지분야) 노인자원봉사 등록자수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사회복지분야)노인자원봉사 등록자(천명)	5,537×1% =55	5,742×1% =57	5,962×1% =60	6,178×1% = 62	6,381×1% =64

[B13]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률(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가. 성과지표 선정

-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은퇴생애주기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의 준비부족과 사회적 여건의 미약 등에 의해 현재 고령인구는 적극

적이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여가생활이 아니라 소극적이며 비활동적인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음

-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향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화권의 중요성을 공고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질의 제고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노인세대를 위하여 이들이 생산적이며 활발한 여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을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

【산식 및 이용자료】

- 노인문화예술교육경험률 = 노인 문화예술교육참여자수 ÷ 65세 이상 노인수 × 100(%)
- 이용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나. 목표치 산정

- 노인 문화예술교육에의 참여가 단기간 내에 증대되기 어려움
- 그러나 60대 이상의 인구의 문화예술교육경험률이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여, 50대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표 3-72〉 연령군별 문화향유 경험률 변화

(단위: %)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			문화시설의 연간 이용률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2010	2008	2006	2010	2008	2006	2010	2008	2006
전체	전 체	67.2	67.3	65.8	52.2	45.2	41.9	9.2	8.6	7.7
연령	10대	93.5	89.1	93.6	73.1	58.6	62.0	15.8	9.7	11.5
	20대	92.6	93.0	91.4	50.9	48.1	42.8	12.9	11.5	9.5
	30대	78.5	80.5	77.7	56.4	51.4	48.1	9.8	8.2	7.2
	40대	70.1	67.1	64.7	52.5	42.4	39.2	6.5	9.2	9.3
	50대	51.3	46.1	43.8	47.3	38.2	35.2	7.1	8.0	4.9
	60세 이상	28.6	26.7	24.7	42.9	35.9	31.4	6.7	4.7	4.8

자료: 조현성(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와 같은 연령군별 차이를 감안하여, 향후 노인의 문화예술교육경험률은 2015년까지 50대의 현 문화예술교육경험률 8%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 이는 50대 인구의 일부가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내에 60대로 이행하며, 다양한 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세대 간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노력에 따라 50대 경험률이 60대 이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0대 이상의 문화예술교육경험률을 매년 0.2~0.3% 포인트씩 증시키여야 할 것임

〈표 3-7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문화예술교육경험률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문화예술교육경험률(%)	7.0	7.3	7.5	7.8	8.0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B14]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가. 성과지표 선정

-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 자유로운 삶을 요구하는 노년층 증가
 - 통계청의 가구추계에 의하면 2010년 노인 1인 또는 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18%인 312만 가구에 달함
- 그러나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소득이 낮은 고령자일수록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 2010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원은 2010년 65세 이상 고령자 542만 명(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0.32%에 불과
 - 고령자 의료비가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고령자 건강상의 특성도 있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골절 등에도 기인함
- 따라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고령자가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긴요함
-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실현하기 위한 주거 보장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은 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로 간주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이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70% 이하가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30년임

【산식 및 이용자료】

-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비율 = 해당연도 고령자용 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 ÷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실적 × 100(%)
- 이용자료: 국토해양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자료

나. 목표치 산정

- 고령사회로 진입한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건강상태가 나빠서 일상 생활에도 매일 조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비율이 약 3%, 건강상태가 양호해서 고령자 전용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비율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공급실적이 적어 2001년 고령자거주안정법을 제정하여 민간이 고령자의 노화에 대응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용시설 건설비의 2/3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고령자용 주택을 많이 건설하였는데, 건설 자금 융자나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건설할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임
- 또한 많은 입주자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용 주택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표 3-74〉 선진국 고령자 거주상황

국가명	전체고령자중 요양시설 입소비율	고령자 전용주택 입소비율
영국(1984)	노인 홈 3.0%	리타이어먼트 하우스 5.0%
스웨덴(1990)	노인 홈 3.0%	서비스 하우스 5.6%
덴마크(1989)	노인 홈(프라이 홈) 5.0%	서비스부고령자주택/고령자주택 3.7%
미국 (1992)	너싱 홈 5.0%	리타이어 먼트 하우스 5.0%
일본(2004)	개호보험 3개시설 3.2%	고령자주택 1.1%

자료: 高齢者住宅財團(2004)이 제공한 자료에 일본 2004년 통계는 井上 由紀子(2008) 자료에서 재인용

-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이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의 미정착으로 고령자 중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적으며 또한 고령자 주택을 공급한 많은 업자가 부도를 내는 등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함
- 우리나라 고령자중 생활비로 사용가능한 연금을 받고 있는 계층은 전체 고령자의 3.4% 수준에 불과
-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이 공급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부지 확보, 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 등은 2008년 12월 김제 하동에서 79호 공급이 처음
- 2004년 시범사업 453호 공급 이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승인 실적은 7,953호이나, 연도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표 3-75〉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실적

(단위: 호,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전용주택	2,201	569	497	685	680	2,868
국민임대	96,188	96,815	110,310	84,882	48,310	35,252
고령자용 임대주택 비율	2.3	0.6	0.5	0.8	1.4	8.1

자료: 국민임대주택은 2009년까지는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2010) 참고하여 작성, 고령자전용사업승인실적은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 2011년 4월 이후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중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은 3%) 의무비율 설정
- 이러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감안하여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목표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합하여 2012년에는 4%를 목표치로 공급하도록 기준을 설정
 - 2011년 목표치가 4월 발표된 점을 감안하고, 수도권대 비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비율이 6:4임을 고려할 때, 2011년 고령자 임대주택이 기준으로 지어진다고 해도 최대 비율은 3.5% 수준
 - 2012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급물량에 기준비율을 적용하면 4% 수준이 될 것임
 - 고령자의 높은 자가율(2010년 74.8%)과 생활비가 가능한 연금수급자 비율 (3.4%) 감안 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고 수요층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 반영

〈표 3-7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고령자전용임대주택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고령자 전용임대주택 공급비율(%)	3.5	4.0	4.0	4.0	4.0

[B15] 노인교통사망률(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가. 성과지표 선정

- ☐ 고령친화적인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노인이 외부와의 접촉을 원활히 할 수 있음
 - 고령친화적인 교통환경을 구성하는 안정성과 편리성 중 안전성이 좀 더 시급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는 사망률의 저하로 종합될 수 있을 것임
- ☐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5년 26.7%에서 2006년 27.4%, 2007년 29.0%로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29.6%)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노인인구비율에 비추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미국이나 일본의 노인교통사고사망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
 - 25~64세 연령군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이 25.3(10만명 당)으로 노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 따라서 고령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며,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교통사고사망률’을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

【산식 및 이용자료】

- 노인교통사고사망률 =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 65세 이상 노인수) × 100,000(명)
- 이용자료: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나. 목표치 산정

- 우리나라에서 2008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은 10만명 당 35.2명에 달했음
- 비교적 노인과 타 연령군과의 교통사고사망율의 차이가 적은 미국의 경우 노인의 교통사고사망률이 13.4로 전체연령군의 11.0의 약 1.2배 수준에 불과함
- 일본의 경우에도 노인의 교통사고사망률이 10.2로 낮음

〈표 3-77〉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점유율 추이

(단위 : 건,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발생	전체	214,171	213,745	211,662	215,822
	노인	19,066	19,557	21,134	23,012
점유율(%)		8.9	9.1	10.0	10.7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표 3-78〉 교통사고 사망률 국제비교(2009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률 (명/10만명)		
	전체 연령층	14세 이하	65세 이상
한국	12.0	1.9	35.2
미국	11.0	2.3	13.4
일본	4.5	0.7	10.2

자료: 도로교통공단 『2009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비교』, 2011.

- 현재 한국의 노인교통사고사망률이 OECD 최고 수준임을 감안하면, 노인교통사고사망률의 절대 수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야 함
- 노인의 교통사고사망률을 다른 연령군의 수준과 비교하여 감소폭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오히려 선진국 수준을 감안하여 교통 환경 및 인프라, 국민 인식 등에 따라 노인교통사고사망률의 감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 2009년 기준 노인교통사고사망률 35.2를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내에 30(선진국의 2~3배 수준)으로 줄이도록 함

〈표 3-7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교통사고사망률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교통사고사망률(명/10만명)	34	33	32	31	30

[B16]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혜자(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기반 마련)

가. 성과지표 선정

- ☐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단독가구가 계속 증대
 - 노인단독가구는 비상시 도움을 즉각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하고 사회적 연계망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가구를 위한 특화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지역 특화된 정책개발 필요
 - 65세 이상 1인가구는 2010년 현재 약 백만명에 달하며 이중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은 약 18만명으로 추정
 - 독거노인은 여성노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으며(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약 1/4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권중돈, 2008) 등 취약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 따라서 독거노인 등을 보호하고 돌보는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혜지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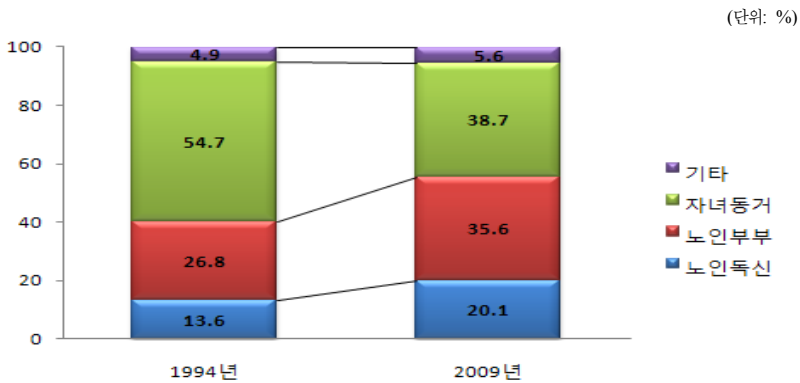
【산식 및 이용자료】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혜자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노인의 거주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과 같은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
-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단독가구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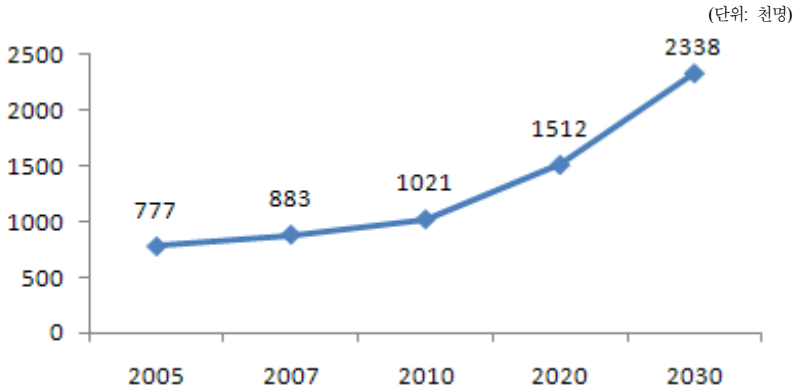
[그림 3-16] 노인의 거주 형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 특히 우선적인 정책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볼 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노인 중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1994년의 13.6%에서 2009년 20.1%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견됨

[그림 3-17] 향후 독거노인 증가 예측추이



자료: 통계청(2007), 2005-2030년 장래가구추계

- 65세 이상 1인가구는 2010년 현재 약 백만명에 달하며 이중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은 약 18만명으로 추정
- 2010년 현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대상자 규모는 약 146천명임
- 향후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혜자를 매년 2만명씩 증가시켜 2015년에 독거노인의 20%에 달하는 25만명을 목표로 설정함

〈표 3-8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혜자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수혜자수(만명)	17	19	21	23	25

[B17]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수(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기반 마련)

가. 성과지표 선정

-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들이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이 감소됨에 따라 가족 간 갈등

과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부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노인학대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임
 -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2005년 2,038건에서 2008년 2,3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09년에 이루어진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법적인 정의에 의한 노인학대 발생률이 노인학대 경험률은 13.8%이며, 이중 정서적 학대 11.0%로 가장 높으며, 방임 3.7%, 경제적 학대 0.7%, 신체적 학대 0.6%, 유기 0.5%, 성적 학대 0.1%의 순임
- 따라서 증대해가는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신고·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공적인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학대 사례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이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있음
- 그러나 노인 인구 수 증가에 비례하여 학대 문제를 상담하는 사례 수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만으로는 피학대 노인의 보호 및 상담에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
 -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학대 피해노인 쉼터, 시설보호가 부족
 - 지역적 특수성(산간·도서지역)을 고려하면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는 더욱 부족한 실정
- 이와 같이 노인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러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

【산식 및 이용자료】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수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나. 목표치 산정

- 2009년에 이루어진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법적인 정의에 의한 노인학대 경험률은 13.8%로 지속적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대를 통하여 적절한 보호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현재 경기도 3개소, 서울, 부산 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각각 2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시·도가 9개에 달하고 있음

〈표 3-81〉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추이

(단위: 개소)

	2007	2008	2009	2010	2011
기관수	18	19	20	23	24

〈표 3-82〉 2011년 현재 시도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수

(단위: 개소)

시·도	기관수	시·도	기관수
전국	24	경기도	3
서울특별시	2	강원도	2
부산광역시	2	충청북도	2
대구광역시	1	충청남도	1
인천광역시	1	전라북도	1
광주광역시	1	전라남도	2
대전광역시	1	경상북도	2
울산광역시	1	경상남도	1
		제주특별자치도	1

- 학대노인 보호 등은 접근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요하므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단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시·도에 1개소씩을 추가 설치하여 2015년까지 모든 시도가 최소 2개소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2012~2014년까지는 매년 2개소, 2015년에는 1개소를 신설함
- 이를 위하여 2015년까지는 모든 시·도에 2개 이상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기본적인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

〈표 3-8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수(개소)	24	26	28	30	31

제4절 성장동력 부문 성과지표 및 목표치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C1]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비율(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가. 성과지표 선정

- ☐ 낮은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이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토록 규정
 - 2006년부터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 2008년부터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확대
- ☐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기관·기업은 2006년 548개소에서 2010년 1,576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기관·기업 수에 비해 아주 낮은 실정
 - 이와 관련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비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함

【산식 및 이용자료】

-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비율 = $\text{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근로자수} \div \text{AA제도 적용사업장 전체근로자수} \times 100(\%)$
- 이용자료: 고용노동부 남녀근로자현황통계

나. 목표치 산정

- AA적용 사업장은 2006년 546개소에서 2008년 1,425개소로 증가(2008년부터 500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는 1,576개소로 증가
- 2010년 현재 공공기관은 255개소(1,000인 이상 66개소, 1,000인 미만 189개소), 민간기업은 1,321개소(592개소, 729개소)

〈표 3-84〉 AA적용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계	1,000인 이상	999인 이하	계	1,000인 이상	999인 이하	계	1,000인 이상	999인 이하
2010	1,576	658	918	255	66	189	1,321	592	729
2009	1,607	666	941	246	66	180	1,361	600	761
2008	1,425	622	803	115	31	84	1,310	591	719
2007	613	613		115	115		498	498	-
2006	546	546		107	107		439	439	-

주: 2006~2008년까지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을 합한 수치임

-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고용비율 평균은 2006년 30.7%에서 2010년 34.1%로 증가
- 여성관리자비율 평균은 2006년 10.2%에서 2010년 15.1%로 증가

〈표 3-85〉 AA적용 사업장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평균)

(단위: 명, %)

구분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전체근로자	여성근로자	여성고용 비율평균	전체관리자	여성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2006	1,597,617	458,584	30.7	169,983	14,178	10.2
2007	1,748,552	536,445	32.3	166,009	15,373	11.0
2008	2,430,320	775,922	33.6	217,717	22,887	12.5
2009	2,566,715	825,850	34.0	254,598	35,836	14.1
2010	2,598,082	846,957	34.1	230,008	29,404	15.1

□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에서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나 관리자 비율이 다소 높음

- 2010년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은 35.60%,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은 16.15%이며
 -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은 33.07%,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은 14.33%임
- 1,000인 이상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1,000인 미만은 2010년 여성근로자비율은 2009년대비 0.17%p 감소

〈표 3-86〉 종사자 규모별 AA적용 사업장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

(단위 : 명, %)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여성근로자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여성근로자비율	여성관리자비율
2006	30.7	10.2		
2007	32.3	11.0		
2008	35.0	13.2	32.4	12.0
2009	35.1	14.8	33.2	13.6
2010	35.6	16.2	33.1	14.3

□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은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은 공공기관 30.1%, 민간기업 34.9%
-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은 공공기관 9.9%, 민간기업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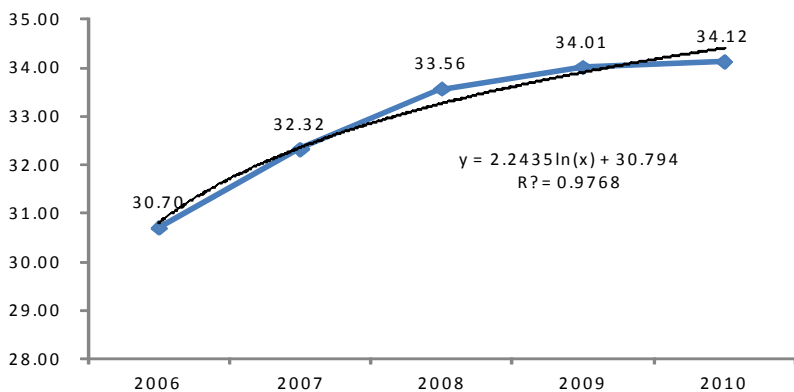
〈표 3-87〉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여성고용실적(2010년 기준)

(단위:개소, 명, %)

구분		대상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근로자	여성근로자	비율평균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평균
공공기관	전체	255	290,659	77,967	30.14	39,084	2,114	9.93
	1,000인이상	66	234,312	61,859	28.95	32,105	1,620	10.97
	1,000인미만	189	56,347	16,108	30.55	6,979	494	9.56
민간기업	전체	1,321	2,307,423	768,990	34.89	190,924	27,290	16.09
	1,000인이상	592	1,798,235	597,228	36.34	151,750	20,811	16.72
	1,000인미만	729	509,188	171,762	33.72	39,174	6,479	15.57

- AA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기준 미달 사업장 독려, 여성근로자 증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 2010년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성고용기준율이 미달인 사업장(335개소, 50.91%)의 비율을 향후 5년간 매년 1%씩 줄여 45%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
 -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513개소 55.9%)을 향후 1,000인 이상 사업장 수준인 45%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
- 그간의 추진 실적을 향후에도 연장하는 경우 2015년 35.96%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상향조정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8] AA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 추이



〈표 3-88〉 AA적용사업장 여성고용비율 추세 유지시 전망치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AA적용사업장 여성고용비율	34.81	35.16	35.46	35.72	35.96

주: 추정식 = $2.2435 * \ln(K108) + 30.794$

-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2011~2015) AA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을 3%포인트 증가 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

- 2006~2010년 간 3.4%포인트 증가세를 향후 5년간에도 유지 목표

〈표 3-8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AA적용사업장 여성고용비율 목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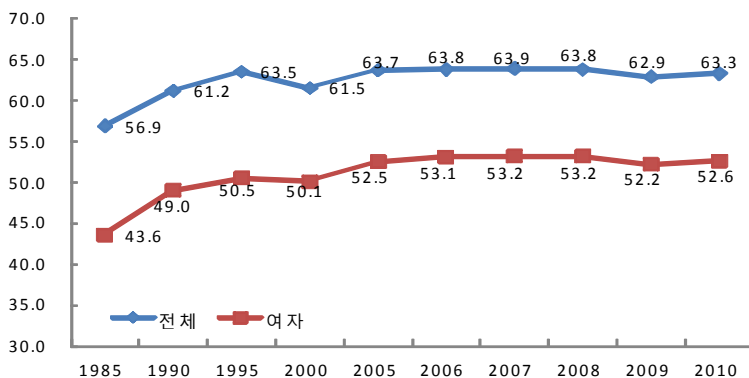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AA적용사업장 여성고용비율(%)	34.72	35.32	35.92	36.52	37.12

[C2] 15~64세 여성 고용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추진)

가. 성과지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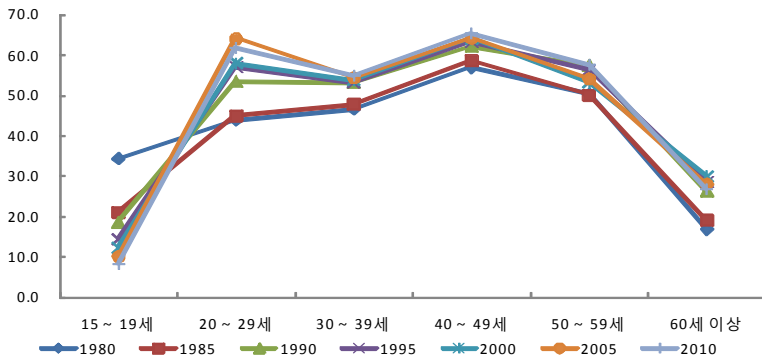
-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은 63% 전후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체상태에 놓여 있음
 - 여성 고용률은 1985년 43.6%에서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1997년에 51.6%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한 후 2005년 이후부터 52~53%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림 3-19] 우리나라의 고용률(%) 추이, 1980~2010(15~64세 기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은 전형적인 M자형으로 임신·출산 및 육아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낮은 수준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미세하나마 고원형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3-20] 우리나라의 고용률(%) 추이, 1980~2010(15~64세 기준)



-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활용 가능한 인구의 낮은 취업성 과에 있음
-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 력을 하여야 하며, ‘여성 고용률’은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로 선정함

【산식 및 이용자료】

- 여성고용률 = $\frac{\text{여성취업자}}{\text{여성생산가능인구(15~64세)}} \times 100(\%)$
- 이용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목표치 산정

-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00년대 중반 50%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49.2% 기록

- 여성고용률은 2000년 47.0%에서 2007년에 48.9%까지 1.2%p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10년 47.8%를 기록

〈표 3-90〉 여성 고용관련 지표(15~64세)

(단위: 천명, %)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00	16,567	8,623	8,292	329	52.0	50.1	3.8
2001	16,659	8,795	8,488	308	52.8	51.0	3.5
2002	16,738	8,956	8,697	259	53.5	52.0	2.9
2003	16,808	8,899	8,589	311	52.9	51.1	3.5
2004	16,881	9,130	8,806	324	54.1	52.2	3.5
2005	16,982	9,254	8,921	333	54.5	52.5	3.6
2006	17,087	9,362	9,070	292	54.8	53.1	3.1
2007	17,198	9,419	9,155	264	54.8	53.2	2.8
2008	17,282	9,455	9,192	262	54.7	53.2	2.8
2009	17,408	9,389	9,090	299	53.9	52.2	3.2
2010	17,549	9,563	9,236	328	54.5	52.6	3.4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 추가 수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외국의 고용률은 40%대에서 80%대까지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함

-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의 여성고용률은 1990~1995년 평균 63.6%에서 2005~2009년에는 평균 69.5%로 5.9%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아이슬란드는 80%대 수준
 -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70%대
 -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의 경우 60%대
 - 일본은 50%대 후반
-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18개국, 분류2)의 경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다소 상승
-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1990~1995년과 2005~2009년 각각 49.3%,

52.9%로 상위권국가와의 격차는 각각 14.3%p, 16.6%p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표 3-91〉 국가별 고용률 추이(15~64세 기준)

(단위: %)

	남성고용률				여성고용률			
	90-95년	95-00년	00-05년	05-09년	90-95년	95-00년	00-05년	05-09년
아이슬란드	83.6	85.8	87.1	86.8	74.8	78.1	80.6	80.4
스위스	88.0	86.9	85.8	84.8	65.9	68.1	70.5	72.1
노르웨이	77.1	81.1	79.7	79.1	67.3	72.1	73.2	73.6
덴마크	78.7	80.8	80.0	80.4	69.0	69.6	71.5	73.2
스웨덴	77.5	74.0	76.0	76.6	75.0	70.4	72.6	72.1
미국	79.2	80.2	78.3	76.4	64.3	67.0	66.3	65.3
영국	77.3	77.5	78.9	78.0	62.2	64.1	66.2	66.5
뉴질랜드	75.2	77.7	79.6	80.9	58.6	62.3	65.3	68.1
캐나다	74.0	74.4	76.2	76.4	61.5	63.2	67.2	69.3
네덜란드	75.7	78.6	80.5	80.5	51.1	58.2	64.2	68.1
일본	81.9	81.7	80.2	81.0	56.5	56.9	57.1	59.2
호주	75.7	76.4	77.2	78.9	56.7	59.6	62.6	65.8
유형1 평균	78.7	79.6	80.0	80.0	63.6	65.8	68.1	69.5
유형2 평균	71.6	70.9	71.0	71.6	46.9	48.2	50.9	53.5
한국	75.5	74.2	74.5	74.5	49.3	49.8	51.5	52.9
OECD전체	76.2	75.9	75.2	75.0	53.0	54.0	55.3	56.8

자료: www.sourceoecd.org, 이규용외(2011)에서 재인용

- 향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여성고용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전반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분야인 보건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및 가사 관련 서비스업, 공공부문 관련 서비스 사업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
-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여성고용률을 OECD 평균에 근접한 50% 중반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향후 5년간 2.5%포인트(매년 약 0.5%p)를 증가시켜 2015년 여성고용률은 약 56.0%에 도달

〈표 3-9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15~64세 여성고용률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15~64세 여성고용률(%)	53.5	54.1	54.7	55.2	55.8

[C3] 전문외국인력(E1~E7)규모(외국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가. 성과지표 선정

- ☐ 고령사회에서 노동력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수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함
 - 그 동안 IT, BT 등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지경부, 교과부가 각각 Gold Card, Science Card 제도를 운영하여 주로 인도, 베트남,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기술인력 도입 소용비용(체재비, 입국 항공료) 지원, 글로벌 인력유치를 위한 Contact Korea 등 추진
 - 그러나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연도별 전문외국인 인력 추이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
- ☐ 따라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전문인력 유치노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전문외국인력(E1~E7)규모’는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간주할 수 있음

【산식 및 이용자료】

- 전문외국인력(E1~E7) 규모
- 이용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나. 목표치 산정

□ 전문외국인력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을 의미하며, 비자유형은 교수(E-1)~특정활동(E-7)까지 체류자격에 해당

〈표 3-93〉 전문 외국인력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체류자격 해당자 또는 활동범위	1회 체류 기간 상한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5년
회화 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연구 (E-3)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A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5년
기술 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의 초청을 받아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5년
전문 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A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5년
예술 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E-6-3)	1개월
특정 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자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 국내 체류 전문외국인 인력은 1999년 말 15,304명에서 2010년 말 43,350명으로 증가하였음

○ 2010년 기준으로 회화지도와 예술흥행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전문

인력 중 특정활동(E-7)이 10,71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구 2,324명, 교수 2,266명 순임

-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비전문 외국인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전문인력의 비중은 2010년 7.9% 등 높지 않은 실정

〈표 3-94〉 체류자격별 전문외국인력 추이

(단위: 명, %)

	분야							계	전문인력 비중
	교수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특정 활동	회화 지도	예술 흥행		
1999,12	926	659	508	435	3,893	5,620	3,263	15,304	
2002,12	826	1,211	212	422	3,323	11,524	3,323	20,841	14.6
2003,12	952	1,411	219	363	3,471	11,344	4,671	22,431	7.1
2004,12	955	1,601	191	298	3,813	11,296	3,813	21,967	6.9
2005,12	1,094	1,765	199	303	4,533	12,439	4,452	24,785	12.5
2006,12	1,159	2,095	166	351	5,729	15,001	4,510	29,033	11.1
2009,12	2,056	2,066	197	536	8,806	22,642	4,305	40,608	7.4
2010,12	2,266	2,324	233	594	10,712	23,317	4,162	43,350	7.9

주: 전문인력은 합법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만 비중 산정시에는 불법체류자도 포함하여 계산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 지수합수 추세모형을 적용하여 최근 추세대로 전문외국인력 추이를 전망하면 2020년까지 연평균 6.45%가 증가하여 82,38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전망방법은 2000-2010년의 11개년도에 대한 외국인 유형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평활(exponential smoothing)기법을 이용하여 2011-2020년 기간에 대해 전망을 실시
 - 지수평활기법을 이용한 예측방법으로는 ‘홀트’의 선형방식(Holt's linear method), 'ghfxm'와 ‘윈터스’의 방식(Holt's-Winter's method) 등 다양한 모형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 중 추정오차가 가장 작은 모형을 최선의 모형으로 선택하여 전망을 실시
 - 추세요인이 지수합수적 추세를 지니는 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선정되어 이를 통해 추정

〈표 3-95〉 전문외국인력 전망치

(단위: 명, %)

	2000	2010	2020	증가분 (2010-20)	연평균증가율(%)	
					2010-10	2010-20
외국인 전문인력	17,878	44,320	82,830	38,510	9.50	6.45

주: 저수합수 추세모형을 통해 전망

- 그러나 전문인력 특히, 연구(E3), 특정활동(E7)을 중심으로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유학생 인력 활용 극대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그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2020년 전망치의 80%를 2015년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2000년 이래 전문외국인 인력은 매년 3~4천명씩 증가하여 왔으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2011~2015)에는 연 6천여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

〈표 3-9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전문외국인력 목표(안)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문외국인력(명)	17,878	44,320	50,482	56,643	62,805	68,966	75,128

[C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체계 확립)

가. 성과지표 선정

- ☐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 등에 대비하여 학교교육과 직업 간의 연계성이 중요함
- 정부는 학력 단계별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하였으며 교과과정과 체험학습 확대 등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직업진로지도 기반을 구축하였음

○ 진로교육 선택비율을 증가시켜왔음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계 고교 2, 3학년 시기에 4단위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일반선택 보통교과로 「진로와 직업」이 편제되어 많은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가 선택·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학교교육과 직업 간의 연계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정보가 제한적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진로관련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

- ‘진로와 직업’ 교과 수강 외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호응이 낮은 편이고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 우리나라 청년들의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비율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산업계가 미치는 영향정도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언, 2009)

- 직업관련 다양한 경험(직업박람회 참여여부, 기업인 강연, 기업체방문, 현장실습)은 OECD 28개국 중 20위 이하 수준이며, 학교교육과정에 산업체가 미치는 영향은 7.43%로 호주(52.1%), 독일(25.7%)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대학교육과 직업 업무간의 낮은 상관성으로 인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이 높음

- 국내기업들의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재교육기간이 평균 19.5개월이고 재교육비용은 1인당 6,088만원에 이름
- 100인 이상 기업이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총비용은 2조 3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경영자총협회, 2008)

○ 대졸 취업자의 전공-직무 불일치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

- 특정 분야의 기업들에서 활용되는 기술요소와 실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요소들간의 불일치정도와 취업률간 상관관계로 관련학과의 불일치

-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현재의 청년층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간 괴리를 줄여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긴요함
-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의 성과지표가 대표성으로 가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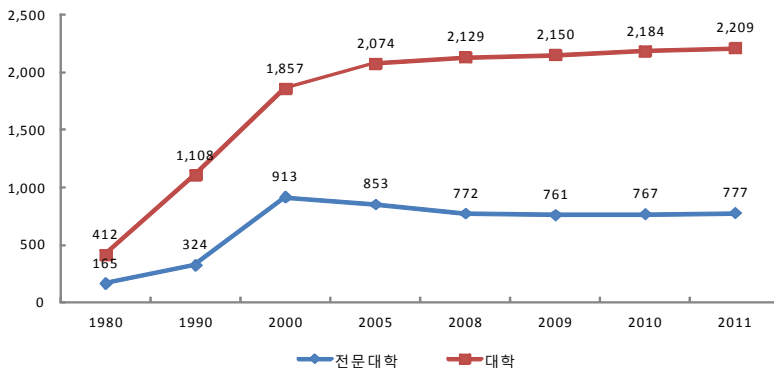
【산식 및 이용자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frac{\text{취업자} - (\text{졸업자} - \text{진학자} - \text{입대자} - \text{취업불가능자} - \text{외국인유학생})}{\text{졸업자}} \times 100(\%)$
- 이용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취업통계연보

나. 목표치 산정

- 1980년 교육개혁의 고등교육 문호개방, 1995년 3.1 개혁에 따른 대학 설립준칙주의 도입 및 대학 자율화 정책 확대 추진 등에 기인하여 고등교육 규모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1년 현재 대학·전문대학 학교 349교, 학생 2,901천명, 교원 73천명 등으로 나타남

〔그림 3-21〕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천명)



주: 대학에는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 (학생수는 재적생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학생 수는 1980년 이후 2010년까지 전문대학 602천명, 대학 1,626천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1985년 36.4%에서 1995년 51.4%, 2000년 68.0%, 2010년 79.0%로 증가함
- 2008년도 한국의 연령별 고등교육이수자비율은 45~64세에서 OECD 평균보다 낮고, 25~44세(특히 25~34세)에서 OECD평균보다 높음

〈표 3-97〉 OECD 국가들의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자 인구 비율, 2008

(단위: %)

	대학교 및 대학원 전체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벨기에	32	42	35	29	22
캐나다	49	56	54	44	40
핀란드	37	38	44	37	29
프랑스	27	41	31	20	17
독일	25	24	27	26	24
이탈리아	14	20	15	12	10
일본	43	55	48	43	26
스웨덴	32	41	33	28	26
영국	33	38	33	30	27
미국	41	42	43	40	40
한국	37	58	43	23	12
OECD 평균	28	35	29	25	20

자료: OECD 교육지표 (2010)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높지 않은 실정임
-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이상 취업률은 77.1%로 OECD 평균 84.5%에 못 미치고 있음
- 이는 주요 OECD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과 비교하여 약 6%포인트가 낮은 결과임

〈표 3-98〉 OECD 국가별 25~64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취업률, 2008

(단위, %)

교육수준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OECD평균
중학교이하	66.1	56.2	65.6	58.1	55.3	61.5	58.7
고등학교	70.7	72.8	82.1	75.9	75.3	80.9	76.1
대학 이상	77.1	83.1	87.8	84.3	85.8	83.1	84.5

주: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와는 조사대상, 방식이 다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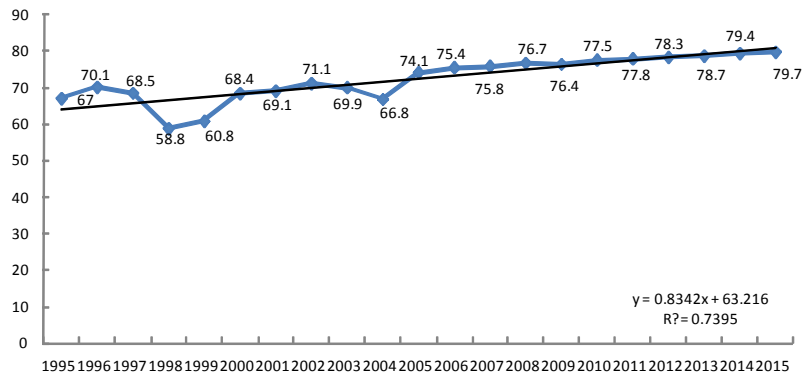
2) 취업자는 임금 또는 이윤을 위해 최소 1시간 이상 노동하는 자, 직업은 있으나 일시적인 이유(상해, 병가, 파업 등)로 인해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직장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를 의미함.

자료: OECD 교육지표(2010)

-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2000년의 68.4%에서 2005년 74.1%, 2009년 76.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현 추세를 연장할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은 이전보다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그림 3-22〕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 추이와 추세선

(단위: %)



- 최근의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2011~2015) 2011년 77.8%, 2012년 78.3%, 2013년 78.7%, 2014년 79.4%, 2015년 79.7%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치로 설정함

〈표 3-9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77.8	78.3	78.7	79.4	79.7

[C5] 평생학습 참여율(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가. 성과지표 선정

- ☐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노동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지식기반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수준은 과거에 비해 고도화되는 반면 특정기술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인 및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수립 필요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평생직업능력 개발로 학령기 정규교육만으로는 근로생애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함
 - 이와 관련 2002년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평생학습 인지도 제고,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예산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였음
 - 그 결과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증가하고 평생교육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음
- ☐ 그러나 국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 하에서 추진되는 평생학습체계가 미흡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것은 훈련수요 및 공급체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

- 따라서 평생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계좌제 및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활성화, 국가자격체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설정하여 자격증 취
득이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참여율’의
성과지표는 대표성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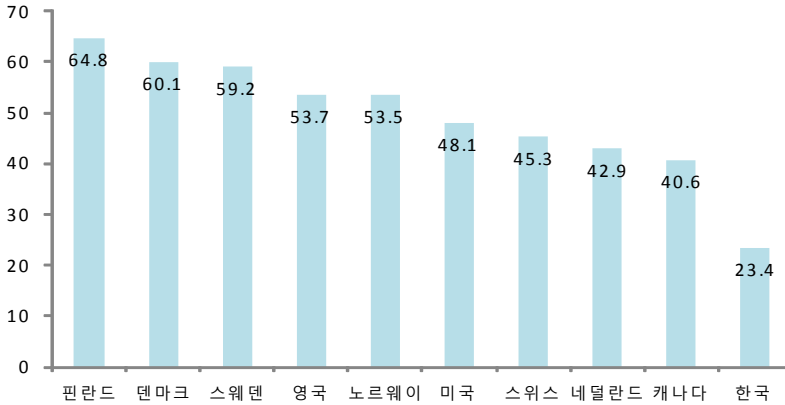
【산식 및 이용자료】

- 평생학습 참여율 = 25~64세 성인 중 평생학습(형식교육 및 비형식
교육) 참여자 ÷ 25~64세 성인 × 100
- 이용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나. 목표치 산정

-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욕구와 실제 참여율 간에 괴리가 존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평생학습참여의향조사(2005)에 따르면 62.8%가
참여의향이 없고, 37.2%만이 중요하다고 응답(이남철·정지선, 2008)
 - 국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자아실현분야 12.5%, 고용가능성 증진분야
9.6%, 사회통합분야 1.7%인 반면, 평생학습 참여요구는 고용가능성
증진 41.2%, 자아실현 35.3%, 사회통합 13.3% 등 괴리가 존재함
- OECD 국가들의 평생학습참여율(2005)은 대체적으로 40~60% 범위임
 - 유럽국가 대부분 50% 이상으로 높으며,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
다 등은 40%대 수준임(이들 국가의 평균 52.0%)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23.4%, 2010년 30.5% 등으로 OECD 국가
들의 수준에 비교하여 아주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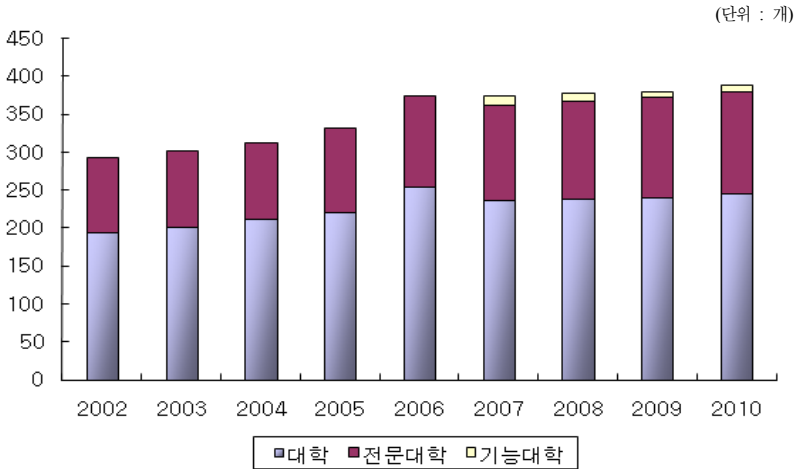
[그림 3-23] 주요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2005



자료: 이남철, 정지선(2008)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 국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욕구가 실제 참여율보다 높아 정책에 따라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앞서 제시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평생학습 참여 의향조사(2005)에 따르면 긍정적인 답변이 37.2%임
 - 공급 측면에서 보면, 2010년 기준으로 학교형태의 준형식 교육기관은 총 3,213개로 관련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평생교육원수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전문대학은 2002년 100개에서 2010년 134개, 대학부설은 194개에서 246개로 각각 증가함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과정수도 2009년 24,037개에서 2010년 25,631개로 1,594개 증가하고, 교육인원은 2009년 758,586명에서 2010년 126,401명으로 증가함

[그림 3-2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추이



주: 1) 대학에는 교육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2) 대학에는 교육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과정), 각종학교(대학과정), 사이버대학(대학과정), 원격대학(대학과정), 사내대학(대학과정),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3) 전문대학에는 전문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과정), 기능대학(전문대학과정),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전공대학이 포함됨
 4) 기능대학은 2007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2006년 이전 자료는 없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평생교육통계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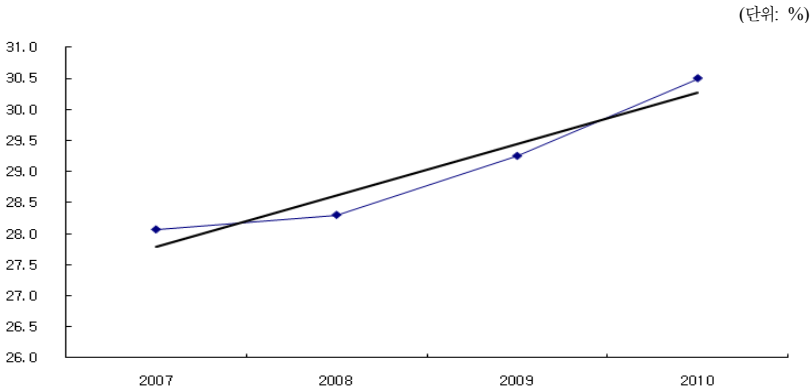
-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최근의 평생학습참여율 증가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참여율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7년 29.8%에서 2008년 26.4%로 다소 떨어졌으나 2009년 28%, 2010년 30.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표 3-100〉 평생학습참여율 추이

	2007	2008	2009	2010
평생학습참여율(%)	29.8	26.4	28	30.5

자료: 통계청

[그림 3-25] 평생학습참여율 추세



- 최근 평생교육원 등 인프라 증가, 국민이 참여욕구(2005년 37.2%) 등을 감안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이 OECD국가 평균의 약 70% 수준인 30%대 중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
-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목표치는 추세선에 의거하여 매년 1.2%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목표치를 산정함

〈표 3-10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평생학습참여율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평생학습참여율(%)	31.1	32.5	33.9	35.3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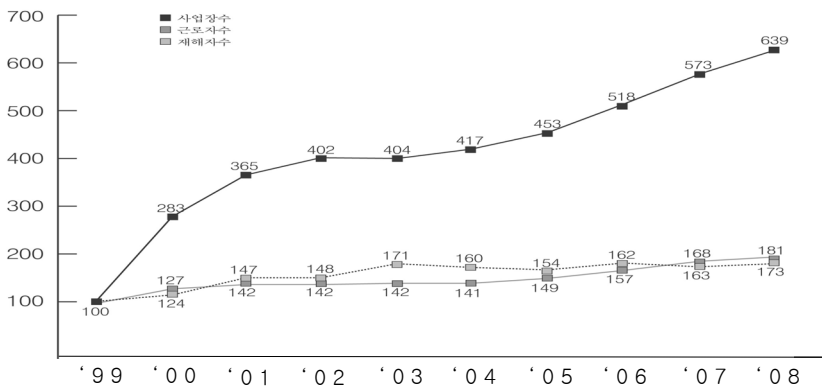
[C6] 산업재해율(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가. 성과지표 선정

- 노동력 부족 등 고령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안전기반을 조성하여 노동력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작업관련성 질환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사업장 자체 예방 활동 촉진 및 홍보를 통한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산재근로자의 직장 고용확대를 통하여 요양종결 즉시 직장복귀를 유도하여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그러나 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 수가 증가하는 등 노동력 및 경제적 손실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1999~2008년 간 재해자 수는 1.73배가 증가함

[그림 3-26] 사업장·근로자 및 재해자 추이, 1999~2008



자료: 노동부(2009), 『2008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율’을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

【산식 및 이용자료】

- 산업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 이용자료: 고용노동부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나. 목표치 산정

□ 산업재해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섬

- 2000년 0.73%에서 2003년 0.90%로 증가한 후,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현재 0.69%로 나타남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2003년 1.02%를 기록하는 등 전체사업장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과 전체사업장과의 재해율 격차는 2001년 0.2%p에서 2010년 0.14%p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사망사고만인을 역시 2001년 1.47p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4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현재 0.97p를 기록 중

〈표 3-102〉 산업재해 현황

	(단위: 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재해율	0.77	0.77	0.9	0.85	0.77	0.77	0.72	0.71	0.7	0.69
전년대비 재해율 증감율	5.5	0	16.9	-5.6	-9.4	0	-6.5	-1.4	-1.4	-1.4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0.97	0.92	1.02	0.96	0.93	0.91	0.85	0.84	0.84	0.83
사고성 사망만인율	1.47	1.3	1.45	1.47	1.26	1.14	1.1	1.07	1.01	0.97
사망자수	2,748	2,605	2,923	2,825	2,493	2,453	2,406	2,422	2,181	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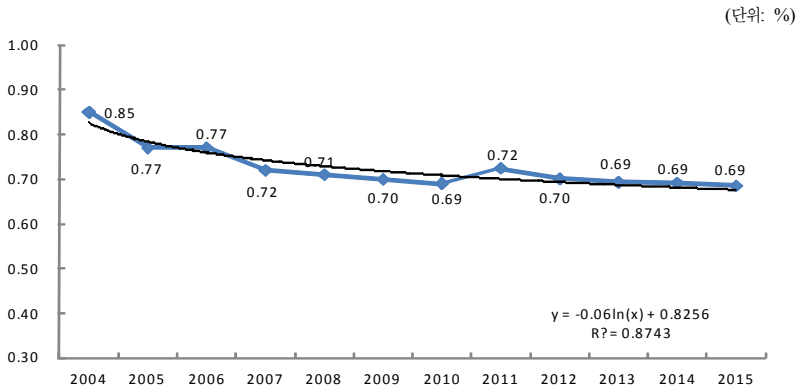
주: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연간 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사망자수의 비율(업무상사고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변동요인 분석

- 외환위기 이후 산업가동률 증가와 2003년 5인 미만 사업장예의 산업안전법 적용확대 등으로 2003년까지 산업재해율은 증가세를 보임
- 하지만, 2001년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대한 클린사업 전개, 2004년 실시한 사망재해예방대책 등의 효과로 2004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됨

[그림 3-27] 산업재해율 추세



- 변동요인 분석 결과, 향후에도 산업구조 변화,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정책적 노력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율의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 여성 등의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진입과 하도급 증가 등의 원인으로 재해유발요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산업재해 유발요인을 감쇄하는 노력을 집중하면 산업재해율은 최근의 감소세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2011~2015)에 산업재해율은 기존 추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 산업재해율이 낮은 수준에 도달할수록 추가적인 감소가 어려운 만큼, 향후 5년간에는 2003년 이래 연간 감소폭(평균 0.02%p)의 1/2정도만을 감소시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함

〈표 3-10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산업재해율 목표(안)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산업재해율(%)	0.73	0.77	0.69	0.72	0.70	0.69	0.69	0.69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C7] 국고채 평균잔존만기(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가. 성과지표 선정

-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생산 가능인구의 조세부담(국민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하여 세대 간 갈등 초래 우려(이삼식 외, 2009)
 - 조세부담률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약 4~5%p(또는 20~25%) 상향 조정 필요
 - 국민부담률도 2050년까지 현재보다 약 6~7%p(또는 22~26%) 상향 조정 필요
- ☐ 요컨대 인구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나 노동력 감소로 세 입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수지 불균형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채 발행 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따라서 인구고령화 등 인구 변동에 대응하여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긴요함
- ☐ 이와 같이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성 내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고채 평균잔존만기’가 성과지표로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산식 및 이용자료】

-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 이용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우리나라의 국고채 평균잔존만기는 2006년 4.55년에서 2009년 4.96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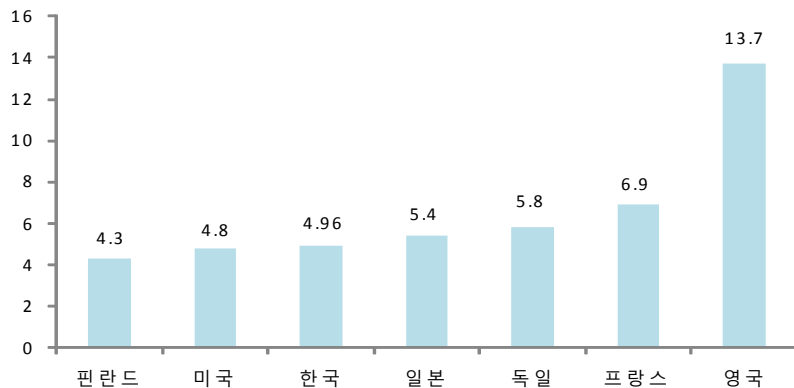
〈표 3-104〉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추이, 2006~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고채 평균잔존만기(년)	4.55	4.68	4.85	4.96	5.17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

-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우 2009년 국채 평균잔존만기가 영국 13.7년, 프랑스 6.9년, 독일 5.8년, 일본 5.4년 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장기적인 특성을 가짐

〔그림 3-28〕 주요 국가들의 국채 평균잔존만기 연수, 2009년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

- 국가재정 안정성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의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연수를 주요 선진국 수준(중위치에 근사)으로 근접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장기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이에 맞추어 10년 이상

-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 및 장기국채선물 거래·결제 편의 제고 등 관련 제도 정비 실시, 향후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수요 확대시 중장기적으로 30년 만기 이상의 국고채 발행 검토 등을 통해 장기국채시장 활성화
-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종료 시점인 2015년에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기년수를 5.50년에 이르도록 목표를 설정함

〈표 3-10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국고채평균잔존만기 목표(안)

(단위: 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고채 평균잔존만기(년)	5.20	5.25	5.30	5.40	5.50

[C8]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가. 성과지표 선정

- ☐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재정 적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임
 -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규모는 2008년 GDP대비 4.0%에서 2030년 11.8%로 크게 증가할 전망(문형표, 김대일, 김동석 외, 2004)
 -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제외한 재정에서의 적자 요인은 2050년에 현재보다 GDP의 약 5% 정도로 확대 가능
- ☐ 2009년도 재정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는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 상향조정 및 지출감축에 필요한 정도는 GDP의 10%수준(재정적자) 전망
 - 저출산·고령화관련 정부지출이 2060년 GDP의 13%로 높아져 선진 7개국(G7) 평균(약 4%)의 3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을 고비로 잠재성장률이 급

격히 떨어지는 한편, 정부의 부채규모가 GDP의 300%를 초과해 사실상 '국가파산' 상황에 이를 것으로 경고(IMF, 2008)

- 이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적정수준 유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성과지표로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산식 및 이용자료】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 이용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통계

나. 목표치 산정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7년 30.7%에서 2010년 3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채무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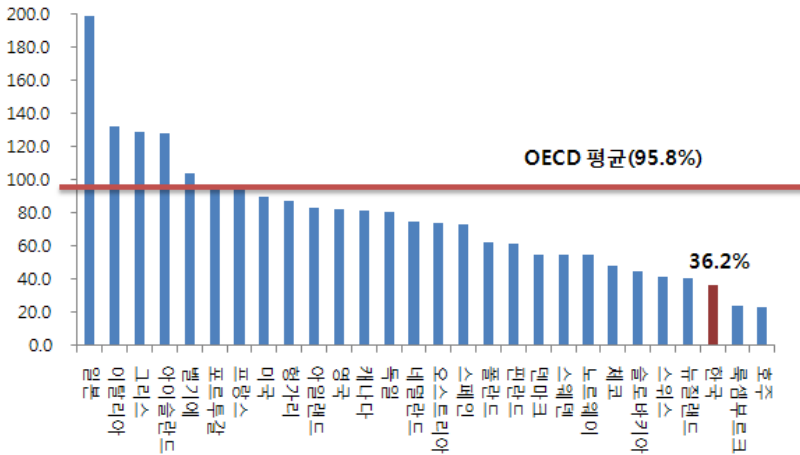
〈표 3-106〉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2006~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1.1	30.7	30.2	33.8	36.1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 그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의 1/3수준에 근접하며, 호주와 룩셈부르크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은 2007년 73.0%에서 2010년 95.8%로 증가하였음(G20 평균은 2009년 75.1, 2010년 80.2)

[그림 3-29] 국가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10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2010.10월 검색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현재와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도 바람직하므로, 페이그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제2차 기본계획 종료시점인 2015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5%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함

<표 3-10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목표(안)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6.0	35.5	35.0	35%이하	35%이하

3. 고령친화산업 육성

[C9]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가. 성과지표 선정

- ☐ 고령친화산업은 궁극적으로 고령자들이 소비 및 투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대상이 됨
 - 고령친화산업의 수요를 표면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질이 성패를 좌우함
- ☐ 노인들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고령친화용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 용품 및 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복지용구 등에 대한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비급여 복지용구 및 기타 고령친화용품에 대해서도 확대·실시되어야 함
- ☐ 이와 관련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는 성과지표로 대표성을 가짐

【산식 및 이용자료】

-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 이용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표시제도를 2007년에 도입함

- 고령자가 고령친화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일부 불량제품이나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이 유통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자 특성을 배려한 우수 제품이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조성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하여 우수제품 지정품목 개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15개 대상 품목의 296개 제품이 지정되었으나, 2010년에 요양용품 위주로 17개 대상 품목의 약 750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친화제품의 품목을 다른 부처의 영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여가상품, 금융상품, 주택 등)
 - 따라서 과거 실적(연평균 250개씩 증가)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매년 250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표 3-10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우수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수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품목	19	21	23	26	30
제품수(개)	1,000	1,250	1,500	1,750	2,000

주: 보건복지부 주관 품목만 표시함.

[C10]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가. 성과지표 선정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시로 복지용구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장성이 취약하여 복지용구점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이었음

-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구임에도 주위 시선을 의식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창출과 적절한 가격의 제품(서비스)의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함
- 현행 3개 지역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은 고령친화산업을 홍보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중심의 건전한 실버시장 조성도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지역친화적인 고령친화용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는 성과지표로 대표성을 가짐

【산식 및 이용자료】

-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
- 이용자료: 지식경제부 내부자료

나. 목표치 산정

-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고령친화산업 수요가 크게 신장될 것을 고려하여 국내산업 수요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KOEX, KINTEX 등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노인이나 부양가족들이 제품의 편익 및 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보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 광주, 성남시 3개 지역에 상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운영 중임
- 고령친화용품 종합체험관의 경우, 그동안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상설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운영비용 과다 및 이에 따른 효과성

- 미흡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체험관을 수요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여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운영 중(일본의 경우 120여개)이나, 관리운영의 문제로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에 가칭 ‘고령친화용품지원센터’를 광역자치단체(16개)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하여 직접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우선적으로 종합체험관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되,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여 활성화하도록 함

〈표 3-10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지원센터 수 목표(안)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역밀착형 고령친화용품지원센터	2	4	8	10	13

제5절 성과지표 목표 관리 방안

1. 성과지표별 목표치

□ 이상 핵심과제별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제시할 수 있음

가. 저출산분야 성과지표(18개) 및 목표치

중영역	소영역	성과지표	산출식	목표치				
				'11	'12	'13	'14	'15
인과가정의 양립 일상화 (5)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2)	육아휴직률(%)	육아휴직자수÷산전후휴가자수×100	60.6	62.8	65.1	67.5	70.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	이용자수÷산전후휴가자수×100	0.5	2.0	3.0	4.0	5.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1)	스마트 오피스 설치 지역(개소)		10	30	50	70	90
	가족친화 직장·사회 환경조성(2)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보육시설 설치, 보육수당, 위탁보육 이행 사업장 수)÷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수×100	65.5	71.2	77.0	82.8	88.5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9)		가족친화인증기업수(개소)		42	51	61	70	80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2)	신혼부부주택지원비율(%)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호수+임대주택 우선공급호수+신혼부부 전세임대호수)÷연간혼인건수×100	9.0	9.5	10.0	10.0	10.0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356.0	391.6	430.7	473.8	521.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	임신·분만 취약지역(개소)		48	42	36	30	25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연간수혜자수÷연간 출산모수×100	14	15	17	19	21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1)	보육·교육비 지원율	(영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 수혜자÷0-5세 아동수)×100	42.4	50.0	56.5	62.0	62.0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4)	평가인증률(%)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 수)×100	81	92	95	97	97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비율	(시간돌봄 유치원수+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수)÷(유치원수+어린이집수)×100	22	25	28	31	34
		아이돌봄비 연계 건수		135만	135만	149만	164만	180만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수(명)	초등돌봄 이용아동수+지역 아동센터 이용아동수+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수	216,800	218,800	242,400	256,600	271,200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4)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1)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드림스타트 수혜아동수÷취약계층아동수×100	11	15	20	25	30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수		728	738	746	753	760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2)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0~14세아동 안전사고사망자수÷0~14세아동수×100,000	4.83	4.54	4.27	4.03	3.80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0~17세 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0~17세아동수×1,000	1.0	1.5	2.0	2.5	3.0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반) 조성(0)							

나. 고령사회분야 성과지표(17개) 및 목표치

중영역	소영역	성과지표	산출식	목표치				
				'11	'12	'13	'14	'15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6)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2)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55~64세 고용자수÷55~64세 인구수)×100	61.2	61.5	61.8	62.1	62.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 중 50세이상 비율(%)	(50세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수÷취업성공패키지 전연령 지원자수)×100	*	전년 대비 5% 증가	전년 대비 5% 증가	전년 대비 5% 증가	전년 대비 5% 증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2)	국민연금가입율(%)	(국민연금가입자수÷18~59 세인구)×100	60.8	61.8	62.9	63.9	65.0
		퇴직연금 가입율(%)	(상용근로자수 5인이상 사 업장 퇴직연금 가입자÷상용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100	35.0	38.0	41.0	43.0	45.0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	(45세이상 건강검진 수검 자÷45세이상건강검진대상 자) × 100	67.4	68.9	70.2	71.4	72.4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1)	50~64세 국민 노후준 비율(%)	50~64세 노후준비응답자 ÷50~64세 인구×100	76	78	80	82	84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1)	노인일자리 창출수	노인일자리 창출 수(공공분 야일자리+민간분야일자리)	20만	22.5 만	25만	27.5 만	30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1)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 급자수÷65세 이상 인구수) ×100	26.0	27.7	27.8	30.1	33.0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3)	차매 조기검진 참여자수		4만 (신규)	4만 (신규)	4만 (신규)	4만 (신규)	4만 (신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 혜율(%)	노인장기요양 등급확정자 (현재 1-3등급)÷노인인구×100	6.6	6.8	7.0	7.3	7.5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60세 이상)(%)	생활체육참여 60세이상인구 ÷60세이상인구×100		51.8	53.3	54.8	56.3	58.0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2)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 (천명)	(사회복지분야) 65세이상 노인자원봉사 등록자수	55	57	60	62	64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률	(노인 문화예술교육참여자 수÷65세 이상 노인수)×100	7.0	7.3	7.5	7.8	8.0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2)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	해당연도 고령자용 임대 주택사업승인실적÷국민임대 주택 사업승인실적×100	3.5	4.0	4.0	4.0	4.0
		노인교통사망률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65세 이상 노 인수)×10만	34	33	32	31	30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혜자		17만	19만	21만	23만	25만
		자방노인보호전문기관수		24	26	28	30	31

다. 성장동력분야 성과지표(10개) 및 목표치

중영역	소영역	성과지표	산출식	목표치				
				'11	'12	'13	'14	'15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6)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2)	AA제도 적용 사업장 여성 고용률 (%) 여성 고용률(15~64세)(%)	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근로자수÷AA제도적용사업장 전체 근로자수×100 여성취업자÷여성생산가능인구(15~64세)×100	34.72	35.32	35.92	36.52	37.12
	외국국적 동포· 외국 인력 활용 (1)	취업자격 취득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규모(명)		50,482	56,643	62,805	68,966	75,128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평생 학습 참여율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25~64세 성인 중 평생학습(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참여자÷25~64세성인×100	77.8	78.3	78.7	79.4	79.7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1)	산업재해율(%)	재해자수÷근로자수×100	0.72	0.70	0.69	0.69	0.69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0)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2)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1)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5.20	5.25	5.30	5.40	5.50
	중장기제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1)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36.0	35.5	35.0	35% 이하	35% 이하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1)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대상품목	19	21	23	26	30
고령친화 산업 육성 (2)	국내·외 시장 활성화 (1)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		2	4	8	10	13
	고령자용 식품 산업기반조성 (0)							

2. 성과지표 관리 방안

가. 성과지표 측정 및 관리

- ☐ 매년 각 성과지표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연도별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를 측정함
 - 한편, 2015년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를 측정함
- ☐ 측정 결과, 성과지표별로 연도별 목표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에는 정책을 조정하도록 함
 - 연도별 목표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향후 연도의 목표치 달성 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 목표치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2015년도 목표치를 상향조정 (이 경우 연도별 목표치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함
 - 연도별 목표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정책의 강도를 높이도록 함
 - 목표달성이 부진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연도별 및 2015년도 목표치를 하향조정함
 - 그러나 목표치를 하향할 경우 정책의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정책을 폐지하거나 다른 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함
- ☐ 이와 같은 과정을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및 ‘정책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나. 영역별 평가

(1) 평가방법

- ☐ 연도별 목표치 달성 비율을 그대로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성과점수)
 - 예로 20% 달성시 20점, 110% 달성이 110점 등(단, 0% 이하는 0점)

- 각 지표별로 가중치를 성과점수에 적용하여 영역별 가중평균점수를 산정 및 평가

(2)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

□ 전문가조사 실시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동력 관련 전문가 8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설문지 조사 실시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대영역, 중영역 및 소영역 각각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중요성 기입 후 인터넷으로 회송

□ 가중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

- (방법 1) 대영역(i)별로 구분하여 소영역별 가중치를 산정(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등 대영역별로 구분하여 성과를 평가하는데 활용)
 - 중영역(j) 및 소영역(k)별 중요도 점수(10점 만점)를 1점기준으로 환산 후 평균(점수)을 구함

$$\text{중영역별 점수 } MS_{j,j} = \frac{\sum_{case=1}^n S_{i,j}/10}{n}$$

$$\text{소영역별 점수 } MS_{i,j,k} = \frac{\sum_{case=1}^n S_{i,j,k}/10}{n}$$

- 중영역별 점수를 소영역별 점수에 적용(중영역별 중요도 적용)한 후 대영역별로 합산

$$\text{소영역별 중영역 중요도 적용 점수 } AMS_{i,j,k} = MS_{i,j,k} \times MS_{j,j}$$

$$\text{대영역별 점수 } AMS_i = \sum_{j,k} AMS_{i,j,k}$$

- 중영역 중요도 반영 소영역 점수를 대영역별 점수로 나누어 가중치를 산정

$$\text{소영역별 가중치 } W_{i,j,k} = \frac{AMS_{i,j,k}}{AMS_i}$$

- (방법 2) 대영역 구분없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소영역별로 가중치를 산정(연도별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활용)
- 대영역(i), 중영역(j) 및 소영역(k)별 중요도 점수(10점 만점)를 1점기 준으로 환산 후 평균(점수)을 구함

$$\text{대영역별 점수 } MS_i = \frac{\sum_{case=1}^n S_i/10}{n}$$

$$\text{중영역별 점수 } MS_{j,j} = \frac{\sum_{case=1}^n S_{i,j}/10}{n}$$

$$\text{소영역별 점수 } MS_{i,j,k} = \frac{\sum_{case=1}^n S_{i,j,k}/10}{n}$$

- 대영역 점수와 중영역 점수를 소영역 점수에 적용(대·중영역별 중요도 적용)한 후 모든 소영역에 대해 합산(전체 합산)

소영역별 대·중영역 중요도 적용 점수

$$AMS_{i,j,k} = MS_{i,j,k} \times MS_{i,j} \times MS_i$$

모든 소영역의 대·중영역 중요도 적용 점수 합산

$$T = \sum_{i,j,k} AMS_{i,j,k}$$

- 중영역 중요도 반영 소영역 점수를 대영역별 점수로 나누어 가중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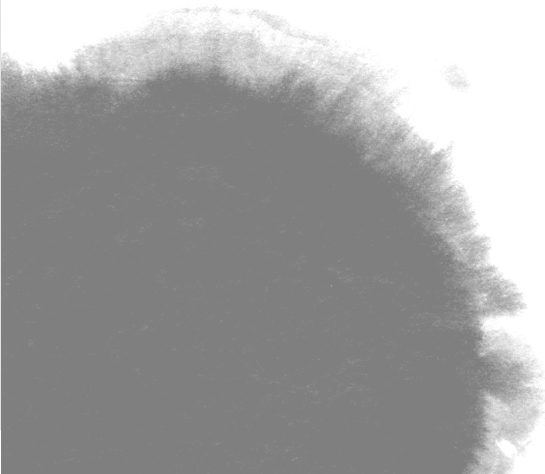
$$\text{소영역별 가중치 } W_{i,j,k} = \frac{AMS_{i,j,k}}{T}$$

〈표 3-1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평가관련 가중치

영역 계	방법1	방법2
		1.0000
1. 저출산영역	1.0000	
1-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①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0.1073	0.0416
②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0.1051	0.0407
③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0.1027	0.0398
1-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중영역)		
①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0.0885	0.0343
②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0.0889	0.0344
③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0.0995	0.0385
④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0.1068	0.0413
1-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①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0.0784	0.0304
②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0.0759	0.0294
③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0.0824	0.0319
④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기반 조성	0.0645	0.0250
2. 고령화영역	1.0000	
2-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0.1116	0.0387
②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0.1085	0.0376
③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0.0988	0.0342
④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0.0901	0.0312
2-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①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0.1097	0.0380
②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0.1103	0.0382
③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0.1098	0.0381
④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0.0930	0.0322
2-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①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0.0867	0.0301
②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0.0814	0.0282
3. 성장동력영역	1.0000	
3-1. 잠재인력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0.1179	0.0314
②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0.0946	0.0252
③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체계 확립	0.1086	0.0289
④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0.0980	0.0261
3-2. 인구구조변화에대응환경제사회제도개선(중영역)		
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0.1041	0.0277
②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0.1061	0.0282
③ 중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제도개선	0.1071	0.0285
3-3. 고령친화 산업 육성(중영역)		
①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0.0976	0.0260
② 국내·외 시장 활성화	0.0894	0.0238
③ 고령자용 식품산업기반 조성	0.0767	0.0204

04

결론



제4장 결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
 -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그 방안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과제들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함
 - 각 성과지표에 대해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달성하여야 할 목표치를 설정함
 - 영역별 성과를 종합화하기 위하여 각 성과지표에 적용할 가중치를 산정함
 -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도별 및 영역별 성과평가 결과의 계량화를 가능토록 함
- 이와 같은 방안은 매년 시행계획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 기간 동안 수정·보완될 경우 부분적으로 성과지표를 조정 내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에 따

라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별 통계자료를 안정적으로 매년 그리고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DB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각 성과지표 관련 통계의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 등과 연결망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0). 『고용보험백서』.
-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 학비 지원 계획』.
- 권중돈(2008).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평가결과와 정책방향”.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개관3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8. 3. 20.
- 김미숙(2008).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8(5), 5-22
- 김미숙·배화옥(2006). 빈곤아동을 위한 미국 Head Start와 영국의 Sure Start 고찰,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12), 129-137
- 김신정(2010).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간호학회지 16(1), 20-29
- 김영섭(2003).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모(2011). 아동학대의 실태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분석, 임상사회사업연구, 8(2), 95-113
- 김혜금(2010).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비교, 아동학회지 31(2), 169-182
- 김혜원·유계숙·김경희·김향아(2007).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 수용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인인력개발원(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도로교통공단(2011). 『2009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비교』.
- 문형표·김대일·김동석·김소영·김용하·박창균·안종범(2004).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1994~2010 각 년도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 박신영(2011). “노인복지주택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1년도 한국주거학회 제4회 학술세미나』, 2011.9.17.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OECD 사회통계지표』.
-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20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 보건복지부(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포럼(2007). “2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포럼』 125호, pp. 122-138.
- 서문희·김은설·장혜경·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노동부.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안국찬(2006).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정책평가 기능의 활성화 방안”, 『정치정보연구』, 9(1), pp. 109-131.
- 오정수·정익중(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 유진이·신미자(2010).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8(3), 통권25호, pp.15-27
- 윤영덕·서수라·김현철(2010). 『일반건강검진사업의 효과 평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윤준선·유보영(2010). “청소년 시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청소년시설환경』, 8(3), pp. 59-67.
- 윤준선·정현균·김지훈(2009). "청소년 시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성남시 청소년 시설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7(4), pp. 85-96
- 이남철·정지선(2008). 『평생학습계좌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삼식·이지혜·최효진·한진희·방하남·김현숙·우석진·최준욱·김순옥·배성일·박효정·서문희·김혜원·이태진·신윤정·최성은(2009).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정경희·김경래·이은진·강인·이금룡·한정란(2010).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완정·권혜진·양성은(2009). “아동빈곤”, 『아동학회지』, 30(6), pp. 337-347
- 이윤식 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신판). 서울: 법영사.
- 일본 후생노동성(2009). 『2008년도 雇用均等基本調査』.
- 임언(2009). “OECD국가의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1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경희·이윤경·오영희·손창균·윤지은·이은진·권중돈·김경호 (2010)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맹제 외(2008). 『치매 노인 유병률 조사』. 서울대학교병원.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1). 『2010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단(2011).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지선하 외(2005). 『건강검진 검사항목의 타당성평가 및 의료비 분석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용준·이태진·김준수·김진현·임재영·조창익(2008). 『국가 건강검진

사업의 경제성 평가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한국경영자총협회(2008. 9). 「대졸신입사원 채용 및 재교육 현황조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5). 『세계의 청소년 교육문화복지시설』.

황나미 · 조재국 · 김혜련 · 박현태 · 김기옥 · 김기수 · 이상원 · 윤강재(2007).

『저출산 대응과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서비스 혁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日本 全國保育團體連絡會 保育研究所(2011). 2010 保育白書.

Hegewisch, Ariane and Janet C. Gornick (2008). Statutory Routes to Workplace Flexibility in Cross-National Perspectiv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Feyzioğlu, Tarhan, Michael Skaarup and Murtaza Syed(2008.1). "Addressing Korea's Long Term Fiscal Challenges", IMF Working Paper.

Mohr Lawrence B. (1988). Impact Analysis for Program Evaluation. Chicago: The Dorsey Press.

Nakamura, R.T. and Smallwood, F.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OECD. Family database.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and Care. Paris: OECD Publications.

OECD(2007). Society at a Glance 2006.

OECD(2008). OECD Factbook 2008.

OECD(2008). Pensions at a Glance.

OECD(2010). OECD Factbook 2010.

井上 由紀子(2008) “日本介護保険制度と居住系サービスの概要” 「한일노인 복지시설국제세미나」 2008.3.5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0).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2010)』.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각년도(2003-2010).

보건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2007). 『2005-2030년 장래가구추계』.

통계청(2009).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2009). 『사회조사』.

통계청(2010). 『고령자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통계청 보도자료(2009).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 비교』.

OECD. Family database, 2010.

OECD. Economic Outlook.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www.index.go.kr/>)